



제 262회 제2차 정례회
2021. 11. 5.(금) ~ 12. 14.(화)
행정자치위원회

- 2021년도 -
행정사무감사자료

차 례

I. 공 통 사 항

1. 분장사무 현황	05
2.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2019~2020)	06
3. 시정 질문 조치결과(2019~2021)	13
4. 상임위 활동시 지적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2019~2021)	13
5. 다수인 민원(5인 이상) 처리 현황(2021)	13
6. 위원회(협의회 등) 운영현황(2019~2021)	13
7.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2019~2021)	13
8. 다수인 참여 행사(100인 이상)(2019~2021)	13
9.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2020.10~2021.9)	14
10.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집행) 내역	14
11. 특별교부세 집행현황(2019~2021)	14
12. 예비비 지출내역(2019~2021)	14
13. 예산전용 현황(2019~2021)	14
14. 예산의 변경 현황(2019~2021)	14

Ⅱ. 대변인 소관

1. 시장 인터뷰, 대담 추진현황(2019~2021)	17
2.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보도율(2019~2021)	18
3. 언론사 시정 오보현황(2019~2021)	19
4. 인터넷TV 운영실적(2019~2021)	19
4-1. 인원 및 장비 현황	19
4-2.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실적(효과) 및 향후 계획	19
4-3. 장비구축현황(업체, 시스템, 구입일자, 사업비 등)	21
4-4. 운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23
5. 주요 시정홍보 현황(2019~2021)	23
5-1. 홍보예산 현황(타 광역시 등 비교)	23
5-2. 언론매체(신문, 방송, 기타) 활용 홍보 현황	24
6.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2019~2021)	25
7. 언론사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집행현황(2019~2021)	123

I. 공통 사항

1. 분장사무 현황

부서	정원	팀 명	현원	분 장 사 무	비고
대변인	29		29		
	29	보도기획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신문, 인터넷신문 등 관리(지도·감독) · 고시·공보 및 공보 발행 · 음향 및 방송시설 운영 · 아카이브 시스템(사진기록물) 관리 · 인사, 조직, 감사 및 주요업무계획 · 일반사무 및 보안,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방송 콘텐츠 기획·제작 · 대전시인터넷방송 및 영상실 운영 · 시정홍보 영상물 자체 제작 및 지원 · 방송사와 협력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 · ENG 카메라 촬영 및 영상물 편집 	
		언론협력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단체 협조지원, 언론홍보계획 수립 · 시정 보도자료 작성 언론사 제공, 언론스크랩 · 실·국 브리핑, 언론 광고, 공고 의뢰 · 기획보도에 관한 사항 · 언론사 대담, 인터뷰 · 시정 사진자료 촬영 및 관리 · 시 출입기자 취재지원 및 기자실 운영 관리 	
		정책보도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보도에 관한 사항 · 시정 정례·수시브리핑 자료 작성 · 시정 핫뉴스 선정 및 홍보 · 시 홈페이지 콘텐츠(Story 대전) 운영 · 주요회의 메시지 보도자료 작성·홍보 	

2.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2019~2020) / 총 7건

○ 2019년: 총 2건(완료 2건)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과	담 부 당 서
<p>○ 대전시 전체 홍보 컨트롤 타워의 부재</p> <p>- 대변인실은 대전시 전체 홍보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p> <p>- 실·국별 홍보예산에 대한 파악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p> <p>- 일괄적인 대전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대변인실의 중심적인 역할의 대안 마련</p>	<p>〈기본현황〉</p> <p>○「실·국장 전략홍보 회의」 운영</p> <p>- 구성: 본청 실·국장급 이상 / 주재(행정부시장)</p> <p>- 일정: 주 1회 / 매주 목, 현안점검회의의 활용</p> <p>- 주제: ① 실·국별 주요행사(2주간) ② 주요정책 및 이슈사업</p> <p>〈추진상황〉</p> <p>○「실·국장 전략홍보 회의」 개최</p> <p>- '19. 3. 21.(목) 1차 회의 개최 / 매주 목요일</p> <p>- 2주간 주요 행사 실·국별 보고 및 협조</p> <p>- 홍보 시점 및 방식 등 홍보전략 논의</p> <p>○「2021 홍보전략 소통회의」 개최 / 매주 1회</p> <p>- (구성) 정책기획관, 대변인, 홍보담당관</p> <p>- (주재) 정무수석보좌관</p> <p>- (운영) 실·국별 중점 홍보방향 등 논의</p> <p>〈향후계획〉</p> <p>○「홍보전략 소통회의」지속 개최(주1회+수시)</p> <p>- 일관성 있는 시정의 전략적·맞춤형 홍보 추진</p> <p>- 주요 현안사업별 신규 홍보아이템 발굴</p> <p>○ 홍보 로드맵 구축</p> <p>- 이슈사업 단계별 홍보로드맵 작성·관리</p> <p>○ 실·국별 홍보예산 파악·관리</p> <p>- 정책사업 홍보시 중복성 제거, 효과성 제고 (2021년 실·국별 홍보예산 : 5,343,000천원 2020년 실·국별 홍보예산 : 5,949,900천원)</p>	완료	대 변 인

(2019년)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결 과	담 부 당 서
<p>○ 대전시 홍보예산에 대한 통계자료 작성과 홍보전략 필요</p> <p>-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타시도 비교분석)가 없다보니 예산대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전시에 걸 맞는 홍보 전략 마련 필요</p>	<p>〈기본현황〉</p> <p>○ 매년 각 실과별 홍보예산 현황 파악</p> <p>- 대상: 신문,TV 등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p> <p>- 2020년 홍보예산 현황: 5,949,900천원</p> <p>- 2021년 홍보예산 현황: 5,343,000천원</p> <p>〈그간 추진상황〉</p> <p>○ 2019년 타시도 홍보비 집행현황 파악</p> <p>- 언론진흥재단 통해 타시도 2019년도 집행내역 현황 파악(대외비)</p> <p>○ 2020년 타실과 홍보비 실집행 내역 파악</p> <p>- 타실과 2020년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비 수시 파악을 통해 홍보비 매체 형평성 고려</p> <p>○ 2021년 타시도 홍보비 예산액 현황 파악</p> <p>- 타시도 대비 대전시 홍보비를 비교, 적정성 파악</p> <p>- 총 예산 대비 홍보비 적정비율 판단을 위한 근거마련</p> <p>〈향후계획〉</p> <p>○ 2022년 타시도 홍보예산 현황 파악 등</p>	완료	대 변 인

○ 2020년: 총 5건(완료 5건)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과	담 부 당 서
<p>○ 보도자료 해명에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p> <p>-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에 있어 소관 부서에서 시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게시하지만, 이를 시민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음</p> <p>- 이에, 시민들에게 부정적 기사에 대한 시 홈페이지 외에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과 해명자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p>	<p>〈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비판보도 해명자료 게시건수 - 2019년(33건), 2020년(38건), 2021년(48건) <p>〈그간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 적극 대응)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서 언론사 직접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 대응 ○ (대 시민 이해 충족) 관련 보도해명자료를 시 내부포털(시도행정) 게시 후 부서 판단 하에 홈페이지에 게시 ○ (실·국장 브리핑 강화) 시정관련 시민홍보를 위한 실·국장 책임 수시 브리핑 추진(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장 시정브리핑 38회 - 시 공식 블로그, SNS, 홈페이지 홍보 / 연중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홈페이지 외 필요한 경우 온라인 매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담당부서 판단과 협의 선행 - 시 공식 블로그, SNS, 홈페이지 홍보 / 연중 ○ 부정확한 보도·오보방지를 위한 언론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브리핑 등 언론소통 강화 - 기자들과의 간담회 활성화 ○ 시 담당부서와 업무협조 및 취재지원을 통한 오보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의 시의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홍보 채널 지원 강화(기자 취재 시 대변인실 상황 통보) 	완료	대 변 인

(2020년)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과	담 부 당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실 관련 사업 자료 등 홈페이지 공개 - 대언론을 담당하는 대변인실의 다양한 사업이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시민 중심의 최신정보를 지속적 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 	<p>〈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홈페이지 상 '대변인실' 사업안내 코너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시정소식, 자료실, 홍보게시판, 영상갤러리 - (위치) 시 홈페이지 ⇒ 대변인실 ⇒ 우리국에서는 <p>〈그간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홈페이지 상 '대변인실' 사업안내 서브메뉴 수정·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20. 12. 17. / 정보화담당관실 - (내용) 대변인실 사업안내 서브메뉴의 명칭 변경, 사업별 링크 등 전면 재구성 ○ 시 홈페이지 상 '대변인실' 사업안내 서브메뉴 구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20. 12. 21. - (구성) 사업별 서브메뉴(6개) *팩트체크, 보도자료, 홍보게시판, 대전찰칵, 대전광역시 인터넷방송, 스토리대전 ○ 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 운영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21. 9. 3. - (구성) 자치구(5), 공사·공단(4), 출연기관(13) - (내용) '보도자료 바로가기' 메뉴 통합·운영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홈페이지 상 '대변인실' 사업안내 코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 시정정보를 시민들에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완료	대 변 인

(2020년)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과	담 부 당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시 청각장애인의 편익제공을 위한 한글자막 등 포함하여 제작 필요 -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에 있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글자막 등이 포함되어 제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한글수어의 경우, 50% 정도 제작되는 반면, 한글자막은 10% 제작에 불과함 - 청각장애인의 편익제공을 위해 자막제공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 	<p>〈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방송 운영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국 일: '07. 12. 27. - 운영인력: 4명(2020년-CMB 위탁업체) -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뉴스 및 관광 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 시정행사 및 브리핑 생중계 지원 ▶ 시민참여 이벤트 개최 등 <p>〈그간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인터넷방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및 영상콘텐츠 제작: 28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이로그 대전(185), 포커스대전(22), 나와유대전(49), 인포대전(7), UCC광장(21) ▶ 시민 참여 이벤트 실시 / 9회 ○ 그동안 콘텐츠 제작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한글자막+수어(0건) / 수어제작(239건/58%) - '19년 한글자막+수어(0건) / 수어제작(174건/43%) - '20년 한글자막+수어(0건) / 수어제작(209건/57%) - '21년 한글자막+수어(141건/50%) / 한글자막제작(185건/65%) / 수어 제작(141건/50%)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수어과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비중을 매년 확대하여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한글자막+수어 50% 이상, 한글자막과 수어 각 60% 이상 - 2022년: 한글자막+수어 55% 이상, 한글자막과 수어 각 65% 이상 - 2023년: 한글자막+수어 60% 이상, 한글자막과 수어 각 70% 이상 	완료	대 변 인

(2020년)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과	담 부 당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시정홍보를 위해 홍보예산 분석 등을 통한 증액 검토 - 대변인실 시정홍보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대전시 홍보예산에 대한 통계분석과 타 시도 홍보예산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정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 추진 	<p>〈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타 시도 홍보비 집행현황 및 홍보예산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TV, 신문 등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하는 17개 시·도 총 홍보비 <p>〈그간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타 시도 홍보비 집행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진흥재단 통해 2020년 집행된 17개 시도 총 집행내역 현황 파악(대외비) ○ 2021년 6개 광역시 언론매체 홍보예산 파악 <table border="1"> <tr> <td>인천</td> <td>부산</td> <td>대구</td> <td>광주</td> <td>대전</td> <td>울산</td> </tr> <tr> <td>71억</td> <td>27억</td> <td>26억</td> <td>20억</td> <td>29억</td> <td>30억</td> </tr> </table> ○ 연도별 대변인실 언론매체 홍보 예산현황 <table border="1"> <tr> <td>2019</td> <td>2020</td> <td>2021</td> </tr> <tr> <td>2,620백만원</td> <td>2,920백만원</td> <td>2,920백만원</td> </tr> </table>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홍보예산 통계 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별, 연도별 통계를 통한 집행내역 분석 - 타 시·도 매체별 통계예산 분석 ○ 2021년 타 시도 홍보비 예산액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 대비 대전시 홍보비 비교, 적정성 파악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1억	27억	26억	20억	29억	30억	2019	2020	2021	2,620백만원	2,920백만원	2,920백만원	완료	대 변 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71억	27억	26억	20억	29억	30억																
2019	2020	2021																			
2,620백만원	2,920백만원	2,920백만원																			

(2020년)

조치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과	담 부 당 서
<p>○ 대변인과 홍보담당관 업무 중복지양과 홍보극대화를 위한 부서별 전략마련</p> <p>- 조직개편으로 대변인과 홍보담당관이 분리되었고, 업무역할도 언론홍보와 대시민 홍보로 분리됨</p> <p>- 부서 간 업무에 대한 중복지양과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바람</p>	<p>〈기본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요) 민선7기 시정성과의 언론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전략홍보회의 시스템 구축 - (방법) 홍보전략 소통회의와 실·국 전략홍보회의를 연동시켜 체계적·전략적인 홍보계획 수립 추진 - (절차) 실·국 홍보계획 자료 제출 ⇒ 홍보전략 소통회의 ⇒ 실·국전략 홍보회의 ⇒ 대변인 (언론홍보) 및 홍보담당관(시민홍보) 추진 <p>〈그간 추진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략 소통회의 개최(주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정책기획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 (주재) 정무수석보좌관 - (운영) 실·국별 홍보계획 분석 검토 후 중점 홍보방향 등 논의 ○ 실·국 전략 홍보회의 개최(월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실·국장 - (주재) 행정부시장 - (운영) 실·국별 주요시정 홍보아이템 발굴 및 최적의 홍보시기, 방법 등 논의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 전략홍보회의 주기적 운영을 통한 실·국별 홍보아이템 지속 발굴 ○ 계기성, 계절성 콘텐츠 및 언론홍보 자료를 기획·발굴하여 적시성 강화 	완료	대 변 인

3. 시정 질문 조치결과(2019~2021): 해당사항 없음

4. 상임위 활동시 지적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2019~2021)

○ 총 괄

연도별	대상건수	추진상황			비고
		완료	추진중	미결	
2019	1	1	-	-	
2020	0	0	-	-	
2021	0	0	-	-	

○ 세부내역

지적 및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서
○ 아카이브 사진기록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2019년 요구사항	<p>○ 아카이브 순회 전시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청, 한밭도서관 등 공공장소 6곳 순회 전시회 개최 <p>○ 아카이브 자료활용 홍보 및 행사자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여행주간 원도심 전시회 / 아트샵21 - 제3회 삼성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 / 삼성동행정복지센터 - 유성구 출범30주년 다정다감 토크콘서트 / 유성구청 - 아카이브 누적 다운로드 건수: 8,624건 <p>*활용범위: 연구, 교육, 홍보자료, 언론보도용 등</p>	완료	대변인실

5. 다수인 민원(5인 이상) 처리 현황(2021): 해당사항 없음

6. 위원회(협의회 등) 운영현황(2019~2021): 해당사항 없음

7.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 현황(2019~2021):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참여 행사(100인 이상)(2019~2021): 해당사항 없음

9.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결과(2020.10~2021.9):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집행) 내역: 해당사항 없음

11. 특별교부세 집행현황(2019~2021): 해당사항 없음

12. 예비비 지출내역(2019~2021): 해당사항 없음

13. 예산전용 현황(2019~2021): 해당사항 없음

14. 예산의 변경 현황(2019~2021): 해당사항 없음

II. 대변인 소관

1. 시장 인터뷰, 대담 추진현황(2019~2021)

추진일정	주요내용	언론매체	비고
'19. 1~2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면제 확정	KBS, MBC, TJB, 지방지 등	
'19. 2월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전략	TJB, TV조선	
'19. 3월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등	CBS 등	
'19. 3월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부지 선정 등	KBS 등	
'19. 3~4월	충청권 4개 시도,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합의	KBS, TV조선 등	
'19. 4~5월	세계최고의 혁신창업 생태계 벤치마킹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 추진 등	KBS 등	
'19. 6~7월	민선7기 1년 성과, 시정운영철학	연합뉴스, KBS, 중도일보, MBC 등	
'19. 10.~'20. 1월	UCLG 총회 유치 2019년 평가 및 2020년 시정운영 계획	KBS, MBC, TJB, 대전, 중도,충투 등	
'20. 1월	대전시티즌 기업구단화 성공 관련	MBC, TJB, 중도 등	
'20. 2~3월	코로나19 관련	KBS	
'20. 3~5월	코로나 및 혁신도시 관련	KBS, MBC, TJB, 충청투데이 등	
'20. 6~8월	민선7기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시정방향 코로나 19 확진자 관리 등	KBS, TBS, 연합뉴스, 중도일보, MBC 등	
'20. 7월	대전·세종 통합 제안 배경 등	KBS 등	
'20. 9월	코로나19 추석연휴 대신민 메시지 3차 경제대책 등	KBS, MBC, TJB 등	
'20. 10월	혁신도시 지정 및 온통대전 관련	KBS, MBC, TJB, CBS등	
'20. 11월	중기부 이전, 메가시티, 대전형 뉴딜 관련	CMB, KBS, 중도 등	
'20. 12월	민선7기 2년 성과와 추진계획	KBS, MBC, TJB, 지방지, 중앙지 등	
'20. 12월	역세권 개발, 광역철도와 메가시티 등	TJB, KBS 등	

추진일정	주요내용	언론매체	비고
'21. 1월	2021년 신년 계획 인터뷰	KBS, MBC, TJB, 지방지, 중앙지 등	
'21. 2월	코로나 19 집단감염 현황	KBS, CBS, TJB, YTN, TBS 등	
'21. 2월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재난지원금지급	KBS, TJB, TBS	
'21. 3월	백신접종 추진계획 등	MBC 지방지, 중앙지 등	
'21. 4월	도심융합특구, 혁신도시, 부동산투기관련	KBS, TJB, TBS 등	
'21. 4월	안전속도 5030 등 교통정책	KBS, MBC, TJB, TBN 교통방송 등	
'21. 5월	혁신도시, RIS 선정, 보문산 개발 등	KBS, MBC, CMB 등	
'21. 6월	탄소중립, UCLG 추진, 온통대전, 주민자치 등	KBS, MBC, CMB 경향신문 등	
'21. 7월	민선7기 3주년 시정 성과	KBS, MBC, TJB, 지방지, 중앙지 등	
'21. 7월	중기부 이전 랩허브 추진,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 등	KBS, MBC, TJB, 지방지, 중앙지 등	
'21. 8월	제3생활치료센터 개소, 마사회 협약, 코로나 4단계 방역 등	연합뉴스TV, KBS, TJB	
'21. 9월	대전시 인구정책,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양육기본수당 도입	KBS, MBC, TJB, 지방지, 중앙지 등	

2.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보도율(2019~2021)

(단위 : 회, %)

연도별	제공건수	보도건수	보도율	비고
2019	2,681	968	36.1	
2020	2,582	934	36.2	
2021.9월말	2,384	853	35.8	

* 보도건수: 주요 지방지 및 방송 등 8개 언론사의 보도건수의 평균

3. 언론사 시정 오보현황(2019~2021): 해당사항 없음

4. 인터넷TV 운영실적(2019~2021)

4-1. 인원 및 장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인력	2021년 예 산 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기 타	
계	4명	230,000	-	230,000	-	
인터넷방송	4명	230,000	-	230,000	-	위탁운영 (TJB)

○ 운영체계

- (시) 운영총괄 및 기획
- (용역추진) 영상물 제작, 인터넷방송 운영, 시행사 중계 협조

○ 용역업체: 2년 장기계약

- 2019.1.1.~2020.12.31. : CMB 대전방송
- 2021.1.1.~2022.12.31. : TJB 대전방송

4-2. 프로그램 제작 등 운영실적(효과) 및 향후 계획

가. 운영실적

○ 뉴스 및 영상콘텐츠 제작

(단위: 편)

연 도	계	브이로그대전	포커스대전	나와유대전	인포대전	UCC광장
2019	382	248	44	49	29	12
2020	367	248	15	36	25	43
2021. 9월말	284	185	22	49	7	21

○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콘텐츠 게재

(단위: 편)

연 도	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2019	907	187	312	312	96
2020	753	45	302	302	104
2021. 9월말	642	36	278	278	50

○ 시민참여 이벤트 실시

(단위: 편)

연 도	횟 수	내 용	비 고
계	19		
201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티즌 홈개막전 응원인증샷 이벤트 · '옥의 티를 찾아라' 페이스북 이벤트 · 2019 대전방문의 해 영상공모전 · 유튜브채널 구독하게 이벤트 · UCLG 대전개최 확정 영상퀴즈 이벤트 · 희망메시지 영상공모 이벤트 	
202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도시, 나의 일상 그리고 코로나19 영상공모전 · 페이스북 시민참여 퀴즈 이벤트 · 유튜브채널 구독 이벤트 · 새해 N행시 이벤트 	
2021. 9월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학개론 퀴즈이벤트 8회 실시(2월~9월) · 코로나19 일상회복 '지금, 여기, 우리' 영상공모전 	

○ 글로벌 콘텐츠 시정뉴스(대전거주 외국인 참여) 제작

(단위: 편)

연 도	횟 수	내 용	비 고
계	3		
2019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태산 자연휴양림(중국어), 계족산(영어), 한국효문화진흥원(중국어) 	
2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제작 연기(외국인 참여관계로) 	
2021. 9월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제작 연기(외국인 참여관계로) 	

-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수시 생중계
- 매월 확대간부회의 및 공감누리 / 시 페이스북 및 유튜브 생중계
- 시 각종행사 촬영 및 언론사 제공을 통한 시정 영상홍보 강화
 - － KBS, MBC, TJB 등 공중파 및 CMB 방송 등
- 케이블 방송 등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공 / 연중

나. 향후계획

- 시정성과의 지속적 홍보를 위해 뉴스 및 관련 콘텐츠 제작
-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 맞는 대전명소 및 정보 소개 등 제작

4-3. 장비구축현황(업체, 시스템, 구입일자, 사업비 등)

(단위 : 천원)

장비시스템	단위	수량	단 가	취득금액	취득일자	비 고
계				1,157,325		
HD ENG카메라	식	1	187,000	187,000	'10.03.26	
HD영상카메라(6mm)	식	1	9,758	9,758	'11.01.18	
프롬프터(Prompter)	식	1	1,504	1,504	'12.11.06	
HD 디지털 스위처	식	1	24,750	24,750	'14.02.13	
HD CG 자막기	식	1	13,500	13,500	"	
HDCAM 리니어편집기	식	1	52,155	52,155	"	
디지털 오디오 믹서	식	1	15,773	15,773	"	
런리니어 편집장비	식	2	37,500	75,000	"	
런리니어 편집장비	식	1	7,740	7,740	'20.03.04	
HD 방송 중계 카메라	식	2	69,915	139,830	'14.02.13	
소형 HD 캠코더	식	3	9,668	29,004	"	
DSLR 캠코더	식	3	13,157	39,471	"	
스튜디오 LED 조명	식	1	44,453	44,453	"	

장비시스템	단위	수량	단 가	취득금액	취득일자	비 고
스튜디오 음향장비	식	1	40,133	40,133	'14.02.13	
비디오 / 오디오 모니터	식	1	8,145	8,145	"	
집합형 HD모듈레이터	식	1	230,000	230,000	"	
버추얼시스템	식	1	36,000	36,000	"	
인터넷방송 서버 증설	식	1	10,500	10,500	"	
모니터 스피커	식	2	668	1,336	"	
HD 표준 모니터	식	4	3,818	15,272	"	
스마트 TV	식	1	3,300	3,300	"	
편집프로그램(ADOBE CS4)	개	2	308	616	"	
편집프로그램(ADOBE CC)	개	4	1,166	4,664	'20.03.04	
이동형 편집장비	대	4	1,484	5,936	'14.02.13	
항온항습 카메라 보관함	대	2	874	1,748	"	
미디어서버	식	1	15,950	15,950	'12.06.21	'15.7.1 관리전환
스토리지	식	1	20,350	20,350	"	"
HD인코더	식	1	7,329	7,329	"	"
포터블중계시스템	식	1	5,061	5,061	"	"
미디어공유스토리지	식	1	28,300	28,300	'17.4.13	구입
미디어공유스토리지	식	1	43,707	43,707	'20.6.25	"
홍보매체 송출용 편집장비	식	1	29,800	29,800	'18.3.8	"
스트리밍 카메라	대	1	3,300	3,300	'21.5.28	"
이동형 프롬프터	식	1	3,465	3,465	'21.6.8	"
생방송중계장비	대	1	2,475	2,475	'21.7.20	"

4-4. 운영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의뢰(2년 장기계속계약)
 - － 입찰공고 후 조달청에서 선정한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개별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 (선정기준) 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에 의거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 － (시) 정량평가(참여인력, 신인도, 사업수행실적 등 총 20점)
 - － (조달청) 정성평가(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등 총 60점), 가격평가(20점)
- ※ 조달청에서 선정한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5. 주요 시정홍보 현황(2019~2021)

5-1. 홍보예산 현황 / 타 광역시 등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대 전	2,620,000	2,920,000	2,920,000	
부 산	2,918,000	2,762,600	2,656,000	
대 구	2,680,000	2,640,000	2,550,000	
인 천	5,025,000	5,025,000	7,135,000	
광 주	1,758,000	1,936,000	1,966,000	
울 산	3,134,000	2,850,000	3,044,000	

5-2. 언론매체(신문, 방송, 기타) 활용 홍보 현황(2021)

(단위 : 천원)

언론매체	주요 홍보내용	지출액	주요성과	비고
계	481회	2,020,460		
신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극복 홍보 · 사회적거리두기, 백신예방접종 등 · 대전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 · 안심콜 코로나출입명단 작성홍보 · 2022 UCLG 대전개최 홍보 · 대청호 오백리길 홍보 	1,075,050	주요시정 홍보를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 송 (지상파, on-line, 인터넷 뉴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통대전 홍보 캠페인 · 안전속도 5030 시행안내 시민홍보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 · 대전 도시브랜드슬로건 영상홍보 ·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캠페인 · 치매안심센터 홍보 ·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796,400	시민홍보와 공익캠페인을 통한 시민관심 제고	
기 타 (월간, 주간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융합특구 홍보 · 혁신도시 대전 홍보 · K-BIO 랩허브 홍보 등 	149,010	주요시정에 대한 심층적 내용 전달	

6. 시정관련 보도내용 해명실적(2019~2021) ※ 시 홈페이지 등에 등재한 사항 포함

• 총 119건수(2019년 33건, 2020년 38건, 2021년 48건)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19. 1.16	해당기자 설명 및 시 홈페이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여성가족원 강사채용 잡음 지속… 면접도 문제제기 - 면접관들이 제각각 전문분야가 달라 객관적인 평가 실시되지 않았고 - 함량미달의 강사가 채용됐다 - 이같은 잡음으로 130여명 수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관들의 전문성·심사 공정성 유사강좌는 범주화하여 8개조로 심사대상을 구성하였고 각 분야별 심사위원으로 전원 외부 관련 분야 교수 위촉 후 공정하게 평가 면접심사 시 분야별 3인 1조 운영하였고, 조별 심사위원(3인)의 면접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최상위인자로 선정 강사의 전문성 강사지원자는 사전공고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1차(서류)에서 검증한 후 면접을 통해 선정 수강취소는 강사채용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상황임 	여성가족원
2019. 3.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짓말 불통.... 대전시, 왜 이러나 / 2019.02.18.(월) 대전시 인조잔디 수의계약 의혹 씻어야 / 2019.02.07.(목) 인영체육단지 무리한 수의계약 의혹 증폭 / 2019.02.01.(금) - 인조잔디 45mm와 55mm,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전시는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45mm를 선택한 사항에 대하여 의혹 제기 등 “A 인조잔디 KS 품질기준 판단 못 해” / 2019.03.13.(수) 45mm 인조잔디 패드, KS기준 위배 / 2019.02.20.(수) 새로운 대전, 구호뿐인 대전시 / 2019.02.17.(일) 대전시 인조잔디 축구장 무용지물 / 2019.02.12.(화) 축구장 바리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2019.02.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인영 생활체육시설단지 축구장(5면) 조성에 필요한 관급자재(인조잔디) 제조, 구매에 대하여 법률과 계약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을 구매하였음 (행정절차 이행)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 적합하고 보편적인 계약임 ①건설관리본부 방침결정('18.12.10.) → ②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18.12.12.) → ③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원안가결('19.01.25.) → ④제3자단가계약 체결('19.01.30.) 총액경쟁입찰 방식은 가격경쟁으로 가격측면(270백만원)에서는 유리하나, 다수(68개업체)의 입찰참여로 계약업체가 제품품질, 시공능력 부족 시 ⇒ 계약기간 미 준수, 시공포기, 품질 불합격 등 사업추진 지연 우려됨 ※ 계약(2,982,227천원) 96.78% 《총액 경쟁입찰(2,711,769천원) 낙찰하한율 87.995%(지방계약법) 	건설관리본부 건 설 2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의 ‘수상한’ 인조잔디 수의계약 / 2019.02.01.(금) 등 다수 총액입찰로 할 경우 최대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약되며, 생활체육동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인조잔디 55mm 제품이 안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시행중인 K리그 그라운드 공인제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KS기준 위배 제품이며, 인조잔디를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조달청에서 기술·품질·성능이 우수한 물품을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전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한 제품을 구매하고자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 하였으며,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된(3개사)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잔디 밀도가 높고, 경제성 우수(단가 유리), 충전재 미사용으로 유지관리 용이, 배수성 신기술 인증 등 우수한 제품을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입한 사항임 ※ 국가가 권장하는 보편적인 계약 방법으로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특혜 의혹 제기는 그동안 법률과 계약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수조달 제품 지정 제도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2019. 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대로면... “대전시 지방채 1조 넘는다” 시가 녹지기금으로 활용키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4,500억 원을 승인받아 났다. 시가 기존 발행한 지방채 약 6,000억원과 합하면 전체 지방채는 1조원이 넘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 5.30 중앙투자심사(녹지기금 활용)를 위해 행안부에 제출한 사업비 총액은 4,589억원(시비 3,936억원, 지방채 653억원)으로 녹지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채는 653억원 임 ‘18년말 대전시 지방채 총액은 5,961 억원으로 이 중 지역개발공채발행액은 4,647억원으로 지역개발공채발행액을 제외한 순 지방채는 1,314억원 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시민 1인당 지방채가 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가장 양호 채무비율(%) : ①대전11.9 ②울산14.5 ③서울17.9 ④광주19.5 ⑤대구20.5 ⑥부산20.9 ⑦인천21.9 지방채(천원) : ①대전418 ②울산499 ③서울629 ④광주646 ⑤대구664 ⑥부산739 ⑦인천76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19. 4.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제’ 진행과정 도마위 ‘예산학교 후 공모’ 수순 무시 :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제도 설명과 함께 방법과 절차 교육의 예산학교 실시 후 공모가 타당함 市 “담당부서 변경원인” 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올해 예산학교(심화과정)는 시민 대학에서 5월에 운영할 예정으로 작년은 하반기에 7월에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작년보다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음, 또한 내년에는 공모이전 3월에 정기강좌에 편성할 예정임 또한 올해부터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100억으로 확대 됨에 따라 사업담당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문제 발생	<p>부서와의 협조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을 작년 5월부터 하였던 것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차원에서 시기를 앞당긴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욱이, 절차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의 의회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개정반영과 함께 설명회를 하게 되는 것으로 부서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시기 및 절차상의 불요불급한 상황이었음 	
2019. 4.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도시주택 행정 왜 이러나 - 아파트 사업 특혜 의혹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적절성 논란 일어 • 민간특례 먹구름, 대전시가 드리웠나 - 매봉 '부결' 월평정립 '제동' 결정권 없는 도계위 결정에 일부서 "허시장 의중" 추측 - 이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사업 추진을 수용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 제기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 - 이미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됐다는 것은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부지(근린공원)에서의 개발 행위 특례사업에 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 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과 비공원 시설 구역을 결정·심의하고 •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심의함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5-1 참조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한 의미는 비공원시설의 종류(공동주택) 및 규모(세대수, 층수) 등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등 "부결" 사유를 보완하여 재상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며, •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님. 	도 시 재 생 주 택 본 부 도시정책과
2019. 4.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6기 색깔 못 뻗 민선7기 '도전탐장' - '민선7기' 새롭게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 중간평가 미흡, 성과평가 기준 없이 스크랩하는 방식이 성과 보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민선7기를 맞아 대전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기 위하여 2019년을 새로운 대전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전의 중·장기 '그랜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음 • '그랜드플랜'에는 시장님 선거공약 외에도 민선7기에서 새롭게 추진할 비전을 담을 것임 	인 사 혁 신 담 당 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외는 별도로 현 시점에서 해결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하여 18개 도전팀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신규현안사업에 대해 실·국별 의견수렴 후 확대계획임 • 현재 각 팀별로 2~3개의 도전목표를 설정, 도전과제 다수가 미해결 과제로 지속되어 민선 7기에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 점을 고려, 충분한 고민과 해결의 시간을 부여한 뒤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 연말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p>※ (참고) 2019.1.1. 25개 직위 중 18개 직위 공모, 인사발령 / 7개 미지정</p> <p>— *미지정 7개 직위 : 원자력안전팀, 투자유치팀, 시민협치팀, 장사시설팀, 시설조성팀, 교통안전팀, 공공교통팀</p>	
2019. 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현 市 교육위원장 “대전어린이집 급식비 불균형” - 어린이집 식품비가 과다 편성된 반면 대전시가 지침으로 급식비에서 가스, 전기요금, 조리기구 구입 등 급식운영비 사용금지 - 타시도에 비해 획기적인 급식비 지원정책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불합리한 집행지침으로 어린이집에 부담주는 정책이 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급식비는 2018년까지 10년 이상 동결되어 중식 1회, 간식 2회를 1,745원으로 정부 보육료에서 제공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음 • 민선7기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현재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집에 영아 500원, 유아 755원을 추가 지원하여 영유아 급식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있음 * 급식비 인상으로 영유아에 질적 급식 제공은 어린이집연합회 요구 사항임 •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식품비 단가가 1,610원(중식1회)으로 낮게제공 받고 있다는 보도는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교육청)의 회계운영 규정의 다름차이 / 보도자료와 동일 적용시 어린이집 유아반 급식비는 528.5원임 * 교육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육료(유아학비)+운영비 = 290천원 동일지원 • 동일하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은 1,745원을 급식비로 법적인 의무 편성하나 유치원은 자율편성(급식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사용)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동일조건 비교 :</p> <p>어린이집 유아 → 1,745원(교육부) + 755원(시) + 취사부 745(시) = 3,245원</p> <p>유치원 유아 → 1,745원(교육부) + 2,300원(교육청) = 4,045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와 같이 정부 동일지원 보육료와 시, 교육청의 각각 급식비 지원으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회계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유치원 회계기준을 어린이집에 적용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함 <p>※ (참고) 어린이집은 정부보육료에서 가스, 전기요금, 조리기구 구입 등을 급식비와 별도로 취사부 인건비, 수용비 편성 규정적용(급식 운영비 사용금지 보도는 모순)</p>	
2019. 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삼 뜯 현대아울렛’ 압초 ‘ - 현대아울렛 진출입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빙현상발생 교통사고위험 - 교통신호등이 없는 도로에 ‘신호등 설치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18. 3월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위와 같은 문제점 진단 주변교통영향 최소화 개선대책을 제시함 관련규정 설치기준 이상 가·감속차로 설치로 위빙현상 최소화 교통영향 엇갈림분석 결과, 양호한 서비스수준 ‘B-C’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 위빙(엇갈림)현상? :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차량들이 인접한 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면서 서로 엇갈리면서 차량간 상충이 발생하는현상 사업지 주변으로 현재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방향별 접근로 신호등 신설(8개소)로 접근관리체계 제시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2019. 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태정 원도심 정책, 상생 주차장 건립 ‘제동’ - 중소벤처기업부 국비지원 규모 177→60억원 ‘축소’ - 최종보고 끝마친 ‘기본계획 용역’ 중단 대책마련 ‘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시책 중 하나로 대종로 일원 지하에 400면 규모의 주차장 및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최종선정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규모가 약 177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축소되었으나 시비를 당초 계획(약 118억 원)대로 투입하고 지하 층고 및 창업공간 규모 조정시 최소 300면 규모의 주차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도시재생 주택본부 도시재생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국비 심의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의 효율화를 통하여 주어진 재원 내에서 최대한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되, 필요한 경우 시비 추가 투입도 검토 예정임 	
2019. 5.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열기 고조 속… 대전시만 지지부진 - 신설법인 증가 수 전국 최하위 - 시 창업지원 성과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의 2019년 1분기 신설법인 증감율은 전분기대비 22.2% 증가하여 7대 특광역시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하여도 6.4% 증가하여 부산광역시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창업지원 사업 및 예산은 기술기반 창업* 관련 사항으로 2019년 1분기 기술기반 신설법인 수는 전년동기대비 20.3%로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존 신설법인 통계를 보완**하여 개인·법인을 포함한 창업 통계를 신규 개발하여 발표(2019.4.25.)한 결과, 2018년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증감률 전년대비 6.5% 증가하여 7대 특광역시 중 최고 증가율을 보임 *전체 기업의 10%에 불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한정되는 한계 보완 이는 민선7기를 맞아 창업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 지원과
2019. 5.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산 변해도 보육교사 수당 요지부동” “오래 일해 고맙다면서… 대우는 그대로” 대전 중구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 추가 지급” 대전일보 - “대전 자치구,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일괄적으로 매월 장기 근속수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우리시 보육정책은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교사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실현에 있으며, 그 사례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장기근속수당이 	공동체지원국 교육복지 청소년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이달·대덕구 7월부터 장기근속수당 지급 - 중구는 오늘 24일부터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함.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는 2만원, 7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는 4만원) - 대덕구도 5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와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를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지원을 검토함. - 5개 구청장은 보육교사의 형평성 및 자치구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 차원에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추가 지급을 일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함. 	<p>10년째 3만원에 머물러 있다는 보도 내용은 단편적인 사례로 사실과 다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일부 광역시만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타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 <7대 특·광역시 장기근속수당 지급 현황> 우리시, 부산시의 경우 3만원(3년 이상), 대구시, 울산시의 경우 3만원(5년 이상)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의 경우 미지급 • 둘째, 우리시는 2010년도 이후 매년 대전시 지방비 예산을 증액하여 스승의 날 특별수당, 처우개선비, 시간외근무수당, 명절수당, 교통급식비, 특수어린이집·영유아반 교사 특별수당 등을 신설하여 전국 최고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 <7대 특·광역시 교직원 매월 처우개선수당 지급 현황> * 우리시 26.7만원 > 울산 23만원 > 서울 22.5만원 > 부산 20만원 > 인천 17만원 > 대구 15만원 > 광주 11만원 ※ 우리시는 광주시와 비교하여 15만7천원을 더 지급하고 있음 • 우리시는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현황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향을 검토할 계획임. 	
2019. 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대전시의원 “대전시 하수도요금, 위법 투성이” - 요금 현실화율 98.9%,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위배 - 수입 573억원 처리,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 등 어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적정처리 이상없다.” • 안행부, 하수도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14.6), 단계별 요금인상 하수도 요금 과다인상과 현실화를 기준(70% 적정)은 사실과 다름 • 최근 3년간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사실이나 •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요금적정화 추진/ 안전행정부 공기업과-3610호(2014. 6. 5.) • 대전시는 1그룹(21개 지자체) : ’17년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 18년도 현실화율 98.9%는 일시적인 현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인상에 따라 수입은 증가한 반면 당해년도 사업여건에 따른 시설비 등 지출이 줄어 원가가 하락한 것임 • 요금현실화율은 당해년도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음 <p>※ 현실화율(원가대비 요금) 일시적 상승 원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8년도 요금 12.5% 인상으로 초과수입 117억 발생(요금상승) • ' 18년도 사업 계속비이월(10개 사업 317억)로 지출감소(원가하락) <p>⇒ 원가하락(↓) / 요금상승(↑) = 현실화율 상승(↑)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발생 주의 회계처리에 따라 적정 결산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잔액으로 기업이익이 아니며,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수입(117억/ 사용료 인상 12.5%)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익계산(영업수익 1,021억)에 포함됨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차기이월액은 재무재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 금융상품에 반영되어 투명하게 관리됨 •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및 불용예산 잔액(573억) • 이익잉여금 : 당해년도 기업운영의 산출된 순이익(23억) 이익잉여금 처리는 관련 법규의 절차대로 적법 처리됨 • 대전시 하수도사업조례 제13조(잉여금의처분)에 따라 • 2018년 이익잉여금 23억은 전기결손금 2,746억 중 23억을 당연히 보전 • 당기 결손금 2,743억으로 이익잉여금 잔액 0원(결손금 감소) 단기금융상품 예치는 기업이익잉여금이 아닌 예산 잔액 운용으로 수입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예치일 뿐 법규 위반이 아님 <p>※ 단기금융상품 예치는 특별회계 뿐 아니라 일반회계의 일반적 자금 운용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관리규정 개정 중(입법 예고 행안부공고 제2018-394)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19. 7.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 선정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시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소장품 선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름. 대전시립미술관은 2018년 시의회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개선을 위해 2019년 소장품 수집관련 조례개정완료 (2019.6.29.) 소장품 구입 방식은 기관별로 상이 하며 수집 방향과 전문가 판단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음. 대전시립미술관은 공정성을 확장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 인사들의 제안제도를 도입 조례에 반영 완료하였음. (2019.6.29) 	시립미술관
2019. 7.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립미술관이 지하 수장고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 값비싼 해외 작품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일부만 전시된 상태임. 또한 개방형 수장고 건립사업은 2019년을 목표로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7월 수집관련 조례개정완료로 구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바, “해외 값비싼 작품을 사들이고 있음”은 명백한 오보임. 2019년 해외작품 구입 내역 없으므로 사실과 다름. 현재 미술관 수장고는 작품 보관 기능에 이상이 없음. 대전시립미술관 매년 ‘신소장품’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소장품 특별전 <DMA컬렉션>으로 3개의 전시를 개최함. 현재 미술관 수장고는 항온항습, 소방, 보안관리 등을 통해 작품 보존을 위한 기능이 차질 없이 가동되고 있어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 미술관 수장고는 철저한 보안 구역으로 해당보도는 취재 출처가 불분명함. 개방형 수장고는 건립단계 부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수립. 시립미술관 관장 교체와 수장고 완공시점은 별개이며 해당보도는 확인된 바 없음. 개방형 수장고 건립계획은 기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음 	시립미술관
2019. 7.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립미술관 홍보가 미흡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안내가 부족하다. 또한 타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유튜브 등 SNS 홍보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포털 내 전시정보 게재 요청 완료하였음. 대전시립미술관 전시정보는 코리아아트가이드, 네오룩 등에 미술전시 정보 검색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안내되고 있음. 	시립미술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는 노후화 된 상태로 작품사진 게재 기능이 없음. •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구축 작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8월 오픈을 앞두고 있음. • 기사에 언급된 ‘점,선,면’은 미술관 전시가 아닌 상설 미술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 란에 안내되어 있음. • 현재 유튜브에 개설되어있는 채널은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님 • 시류에 적합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미술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2019. 8.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동 자치지원관 적절성 논란 • 대전시 자치지원관 제도, 꼭 필요한 자리인가? -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 동 자치지원관 운영이 중요한지 의문제기 - 대전시는 올해 자치지원관을 채용토록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4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80여개 동으로 늘린다는 방침 -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가 약 4천만원으로 구의원 의정비(약 3,700만원)보다 많다는 의견 - 최소 사무관급 이상의 처우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 - 공고 게시기간이나 공고내역 삭제 등 채용과정의 의혹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추진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추진계획」과 민선7기 대전시장 공약에 따라 추진 중임 • 현재, 전국적으로 214개의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중 • (시범사업 목적)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부족,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단순 심의·결정 등 제한된 역할을 극복하고 동 단위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위원수(50명 이내)를 확대 구성(시민 공모 및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 시범 실시를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부터 주민간 토론을 통한 마을의제 발굴·계획·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영방안 등 주민자치회 실행 매뉴얼 마련 및 전파 도모 • (지원내용) 우리시는 8개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2년 동안 1개동 기준 262백만원(‘19년 156백만원, ‘20년 106백만원)을 지원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활용)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마련, 주민총회 등 운영비, 주민자치회 추진사업비, 동 자치지원관·간사 인건비 등 • 시범사업 추가 실시방안은 미정이며, 현행 자치지원관 제도의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은 사항임.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활용 및 공동체지원센터 지원 방안 등) • (동 자치지원관 자격·역할) 행정, 마을활동, 복지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의 경력자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정을 지원하고 현장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촉진 및 사업 실행을 위한 행정 협력을 이끌어 내는 촉진자 역할 •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2년)으로 근무하며 주민자치회 조기 안착과 향후 주민자치회(간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시범운영 중 행정기관, 주민 자치회장,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 지원 • (자치지원관 근무여건) 상근에 따른 인건비(기간제근로자)는 연간 12개월 근무시 약 3,300만원(주휴연차수당 포함)이 지급되고, 주민자치회 사무실(6개동)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2개동) 근무하며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은 미 제공 • 동 자치지원관은 사업시행 주체인 구청별로 마을활동 전문가 등 해당 자격기준을 정하여 공모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였으며, 채용 공고내역은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019. 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작가지원전이 전시 이력을 요구하여 젊은 작가들에게 문턱이 높고, 일회성 전시에 그치고 지역에 머무는 유인책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전시활동이 없는 경우도 서류 응모가 가능함. • 선정 기준은 전시 경력 등의 서류가 아닌 작가의 포트폴리오임. • 특히 올해부터 외부 전문가 심사로 전격 전환하여 작업의 독창성, 창의성이 돋보이는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음. • 청년작가지원전의 목적은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것에 있음. 	시립미술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유, 김해민, 허구영, 민성식, 윤종석 작가 등을 비롯하여 <넥스트 코드> 출신 작가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지역 청년작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 갤러리 전시 및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있음. • 전시경력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선정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름. 	
2019. 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클럽 붕괴사고 후 2019. 8. 8.(목)부터 대전시 637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8. 6.(화) 시 확대간부회에서 발표했으나, 시행 첫 날인 8. 8.(목) 특별조사를 한 곳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도 191개소로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소 637개소 중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소방특별조사를 이미 실시한 대상은 제외하고 이번 소방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별로 일일이 소방특별조사 실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느라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당초 실시 계획 예정 일보다 늦어짐. • 2019. 8. 8.(목) 소방특별조사 계획이 소방서에 전달되어 8. 9.(금)부터 대상별 일정 조율을 거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광주 다중이용업소 붕괴사고 관련하여 2019. 8. 1.(목) 소방청에서 소방특별조사 대상 범위 선정 지침을 받았으며, 2019. 8. 6.(화) 확대간부회의 시 대전시 관할 637개 업소 중 선정 지침에 따라 별도의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대전시 관내 637개소(유홍주점 303, 단란주점 320, 감성주점 14) 중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소방특별조사를 최근에 실시한 대상은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제외하였으며, 191개소(유홍주점 88, 단란주점 100, 감성주점 3)를 금번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소 방 본 부 예방안전과
2019. 8.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대전방송 : 고액채납법인 주소가 주민센터? 영터리 채납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단공개 대상인 법인채납자 대다수가 폐업 중이거나 해산간주 또는 청산 종결간주법인임 	자치분권국 세 정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법인주소 관리 미흡 - 예시로 법인주소가 기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돼 독촉장 등 송달효력 발휘 불가 - 법인 채납자 주소 73곳 중 절반 이상이 채납자와 무관한 법인 또는 개인들의 주소로 확인됨 - 공개된 주소의 현 사업자가 수천만원의 채납자로 오해를 받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폐업으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대표자 주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자도 없는 경우 명단공개 시 공부상(법인 등기상) 주소로 관리 • 해산간주법인이란 회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상법상 휴면회사로 보아 법원이 일괄적으로 해산의제시키는 제도 • 해산의제된 회사가 3년이내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청산종결 간주 등기됨 • 해산간주 또는 청산종결간주법인은 법인격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단공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이 폐쇄된 채납법인의 주소지로 독촉장 및 안내문이 발송됨에 따라 실제 거주인 민원제기 또는 독촉장 발송이 무의미한 경우 제3의 주소로 관리 ⇒ (주)○○○○○○○의 경우 대표자 및 사업장 부재로 임시주소 지정 • 명단공개 목적은 채납자의 성명을 공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성명만 공개 시 동명이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소정보도 동시 공개 ⇒ 채납자 주소공개로 실제 거주인이 채납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하여,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제도 개선 추진 	
2019. 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민간인 별도 채용 ‘예산낭비’ - 대전시가 해외통상사무소 근무자를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채용하여 예산낭비를 초래 - 해외통상사무소 근무인력을 일원화하지 않고 대전시와 산하기관이 각각 따로 관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파견은 ‘설치 초기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한시적으로 인정(행안부 지침) • 이에, 우리시에서는 해외사무소 설립 초기에 ①공무원들을 파견하여 현지 협력관계 구축등 기반을 다진 후, ②수출, 시장정보와 현지어가 가능한 민간 현지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 파견의 경우 인건비외 별도의 파견수당(4천만원 상당)과 주택수당(3천만원 상당)이 지급되어 현지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 지원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됨 <파견자 연봉에 따라 변동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해외사무소의 경우(특히 ‘관시’가 중요한 공산권 국가) 설립초기에 대전시 직영 → 통상지원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관리 중이며, 이에따라 베트남(호찌민 사무소)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17년) 후 3년 간 대전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관내 수출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적절한 운영방안을 모색 중 	
2019. 8.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고용시장 ‘불안’ 장기화 - 대전지역 ‘고용시장’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청 발표 6월 고용동향(‘19.7.10. 발표)에 의하면 대전지역 2019년 6월 취업자 수는 771천명으로 전년 동월(756천명)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월간대전경제 7월호(6월 고용동향)」의 수치 오류로 인하여 취업자 수가 전월대비·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여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도됨. 대전지역 취업자 수가 2019년 5월, 6월 연속 2개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역 고용시장이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일 자 리 경 제 국 일자리노동 경 제 과
2019. 8.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난간 태양광 모듈 느는데... 안전은 그늘속 - 대전시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설치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 안전예방은 지나칠수록 좋기 때문에 외부부착물 무게가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 돌출물 설치 자체에 대해 기본 규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논의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니태양광 지지대의 안전도는 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조건에 설치하여 풍속 50㎞(태풍매미 수준)의 인공 바람을 가한 시험에 견디는 지지대를, 구조 기술사의 안전 확인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위해 모듈을 난간부에 결속 시에는 풀림방지 볼트 및 워셔류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고, 난간 가로대와 4곳 이상 결속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서 정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성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학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19. 8.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 복합터미널 불법 선분양 사실로 - KB부동산신탁에 KPIH 예약금 입금 확인 - 민원신고 접수도.... 區, 경찰 수사 의뢰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는 2019. 7. 15. 유성구청(건축과)으로부터 터미널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분법에 따라 KB부동산 신탁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홍보관(유성구 봉명동)을 개설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사전예약을 받고 있음 유성구는 KPIH를 불법 선분양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함(8.16.) 이와 관련, 우리 시는 복합터미널 건립은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전도시공사, 유성구와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터미널 사업자(KPIH)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2019. 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車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 혼란 -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으로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 혼란 - 계약 만료를 눈앞에 두고 수수료 인상한 시의 행정의 연속성 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우리 시 발급수수료가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저렴함 발급수수료는 공모로 업체선정 시 결정되며 '14년 공모 시 11,000원이던 발급수수료가 6,400원으로 41.8% 하락함 그동안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업체의 여러 차례 발급수수료 인상 요청에도 현행 유지하였으나 '19.9월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면서 신규 형틀 구매 등 시설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발급수수료 조정 함 '14.3월 공모 시 원가산정 당시보다 최저시급이 5,210원에서 8,350원으로 3,140원(60.3%) 상승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2019. 9.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예당, 직원감시용 CCTV 설치 추진?... 대전시 제동 - 대전예술의전당이 직원 감시용 CCTV를 공연장 로비에 설치하려다 대전시의 제동으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상균 관장과 관련 직원의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 감시용 CCTV 설치에 관한 지시 자체가 없었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임. 기사에 “관계자”란 단어로 특정한 사람 중 “예당 관계자”, “대전시 업무 담당자” 등의 증언이라고 보도된 내용 또한 근거 없음 “직원 감시용으로 CCTV 설치계획을 	대 전 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추진했다”, “대전시에 업무담당자를 두 번이나 보내 설치 가능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미친거 아냐”,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브레이크 뉴스>와의 통화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니라 공연장 복도에 설치하려고 했다” 등 예당 담당자 또는 대전시 관계자가 증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담당자들은 전화 통화시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으며 황당하다는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상 직원 감시용으로 CCTV 설치를 추진했던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들은 당시 직원 감시용 이라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는 내용으로만 봐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건너건너 들어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임. “CCTV는 직원들의 근무 모습을 볼 수 있는 로비에 설치하려 추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는 기사의 내용은 조금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남. 직원 감시가 목적이라면 누구라도 사무실 또는 직원 주요 동선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할 것이며, 세상의 그 어떤 바보 천치도 관객이 다니는 공연장 로비에서 직원을 감시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임 또한 2003년 개관 당시부터 공연장 로비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이미 CCTV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음. 	
2019. 9.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입찰 논란 입찰조건을 정보통신분야에서 교통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지역 정보통신업체는 지역업체 참여 배제한 결정이라고 입찰조건 수정요구 정보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 사업(교통)면허를 동시 소지한 관내업체는 한자리수에 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소통 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사업임 특히, 금번 사업의 경우, 대전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스마트신호제어시스템 구축과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등 교통소통에 민감한 신호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과해 지역업체의 입찰기회가 극히 좁아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신호 체계 합리화, 교통체계 설계, 도로 교통 구조물과 부대시설,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 등을 주업무로하는 업체로서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되고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자동차·도로 교통 분야 ITS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교통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참가자격에 포함하였음 • 또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수급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중 일부자격만 갖추고 있어도 공동수급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수급참여 최소지분을 기준이 5%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업체의 지분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 참여지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였음 	
2019. 9.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해소지있다” ...대전예술의전당, 인사 ‘잡음’ -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서 일부 직원 이례적 B등급 - 기존 계획안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 첨부... “객관성 떨어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절차 •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 본인평가 및 소속부서장의 1차 평가 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부의하여 최종 평가를 하고 있음. • 단 1차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 소위원회에 평가결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무실적평가 소위원회: 소속 실·국장이 위원장으로 이의신청 처리, 실·국 순위 결정 등을 처리함 • 대전예당이 1차 평가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의 방법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임. • 기존의 방법은 성과목표에 대한 정량·정성적 측면에서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하였으나 개선안은 목표달성도의 정성적인 부분을 직무수행능력으로 별도 구분하여 평가요소를 명확히 하였고, 이는 일반직 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근무실적 평가에서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임 	대 전 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기존방식은 기관장이 단독으로 평가하던 것을 과장 및 팀장이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바꾸어 오히려 객관성을 높인 것임. • 임기제 공무원 계약 연장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평가를 후하게 주는 것은 평가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 직무능력이나 성취도에 관계없이 비슷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실제로 일부 이와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는 상황임 • 새로운 평가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직원회의 등을 통해 평가 개선안에 대해 이미 공지했던 사항이나 • 평가 대상자의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1차 평가 후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평가 기준대로 재평가를 시행하였음. 	
2019. 9.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콜택시, 닳아버린 안전의식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타이어 마모상태 위험 수준 - 차량관리가 센터 주체가 아닌 운전기사에 관리 전담하여 ‘부실우려’ • 장애인 콜택시 관리기관, 관리책임 기사에 떠넘겨 - 정비일정 따로 없이 개인에 위임 - 실적수당 월급닷에 휴게.개인 시간 쪼개 차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 장애인콜택시는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별(중정비, 특장정비, 경정비) 계약을 통해 차량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스노우타이어에서 일반타이어로 교체하는 2월 중순에서 3월에 타이어 일체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정비업체 방문 시 일상점검표를 비치하여 고장유무를 확인 등 차량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특장차 타이어 교체주기는 평균 1년 6개월 정도이며 월평균 10대(1대당 1~2본 정도)씩 교체하고 있음. ※ 2019년 1~7월중 164본 (총81대)을 교체 하였음. * 특장차 82대 보유 • 타 광역시도 차량의 점검은 당일 운행 운전원이 하고 있으며 기사들의 휴게시간 보장 및 운송수익금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 정비업소 및 예비차량운행을 하고 있음. • 향후, 차량별 정비대장을 전산관리토록하고 일상점검을 강화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음.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19. 1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노인운전면허 반납지지 부진 — 대전시가 지난달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도입하여 10 만원을 지원함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효율성을 떨어뜨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제도는 대전광역시『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안전도시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행 • 인지능력 저하에 따라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운전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책임 • 신규도입 시책 시행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홍보를 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예산확보 시점 까지 보류 • 대전시 제2회 추경예산의 확정이 10 월 2일에 이루어져, 10월 3일 사업을 본격시행하고 홍보를 추진 중에 있음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 1일부터 반납한 분에 대하여 지원 적용) • 예산 확보에 따른 신규사업 본격 추진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 19.4.26.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 • 제2회 추경예산이 ' 19.10.2. 확정된 이후 사업내용 고시, 매뉴얼 배포, 언론보도자료 등 홍보를 시행 • 앞으로의 시행 계획 • 대상자에게 지원할 교통카드를 제작 하기 위한 기간이 약 1개월 소요 됨 • 경찰청에서 통보되는 반납자 순서에 따라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임 	교통건설국 공 공 교 통 정 책 과
2019. 1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교통신호제어기 안전 빨간불 — 대전시청 남문 단일로 교통 신호제어기 수동 조작함 문 이 20시간 가까이 열린 채로 방치돼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남 — 장시간 개방되어 누구나 수동조작이 가능해 공공기물 안전관리에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는 경찰청 소관이었으나, '15년 7월 업무협약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대전시, 신호기 조작 등 일반적 신호운영은 경찰청 업무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신호제어기는 주요행사나 출퇴근 시간대의 차량이 많이 붐비는 특별한 상황에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신호를 조작하기 위해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공 공 교 통 정 책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1,41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하여 잠금장치가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1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주변 지원금 영등하게 쓰인다. 2016년부터 온 매년 2억 1400만원의 지원금 대부분과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등이 집행기관인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강사비(1시간 17만원) 등으로 쓰였고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된 돈은 2000-3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 지침은 20명 이상 단위의 주민들이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거승로 이는데, 3~7명 등 소규모 단위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위탁추진하고 있는 월평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대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음.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사무편람 또한 시 주무부서의 검토를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따로 편성 집행하고 있음. 사업추진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검사를 통하여 반납조치하고 있음. 학생 장학사업 또한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하여 월평지역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추천받아 장학재단의 심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현재 공동체 사업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 전국 대부분 공동체사업 대상은 최소인원을 3인(대표자, 회계책임자, 사업담당자)의 주민 또는 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업의 경우 20명 이상의 단체를 사업대상을 지정하기도 함, 우리 시에서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공모시 3인 이상으로 지역주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9. 11.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도블록 파헤치기 해마다 되풀이 연말을 앞두고 또 다시 대전 지역 인도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불필요한 도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구 중촌동 보도공사는 대전천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 불편 민원에 따른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내년도 봄철 시행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착공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서구 둔산동 보도공사는 도심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해 지반침하 현상이 증가하고 싱크홀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확산되고 있어 싱크홀 유발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울러, 대덕구 송촌동 보도공사는 깨끗하고 쾌적한 상수도 제공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보도에 나온 모든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 주민 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19. 12.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매한 도로구조물 사고 배상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의 한 보도에서 훼손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해 관할 구청에 사고 배상을 신청했지만 cctv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각을 했음. 시민이 피해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게 아닌데 행정 편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일시: 2019. 12. 1(일) 21시경 (날씨: 비) 사고내용 : 보도통행 중 보도가 파손된 곳에 발을 접질러 발목 부상을 당함 민원인과 첫 통화 시, 사고배상 절차 (국가배상절차)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렸음(기각한 사실이 없음) 두 번째 통화 시 민원인이 국가배상 절차가 아닌 영조물배상 절차 안내를 요청하기에, 사고 당시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영조물 배상안내는 불가하며 국가배상 절차를 다시 안내해 드림 서구에서는 19년 8월 이전까지 민원인이 도로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 시 영조물 배상을 통하여 사고 조사 후 배상 절차를 거쳤으나, 보행자의 과실과 이를 남용하는 것이 우려되어 사고 입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을 경우는 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해오고 있음. 현재 시민이 피해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기에 서구에서는 사고발생지 앞의 LGU+영업점에 CCTV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2020. 1.22	해당기자 설명 및 시 홈페이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와이파이 팡팡? ... 직접 가보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공공 와이파이 300곳에 설치했지만 속도가 느리고 접속이 쉽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에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기는 표준규격인 * IEEE 802.11ac를 만족하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하였으며 인터넷 회선은 1Gbps로 통신망을 구축하여 2019. 12. 1 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공공 와이파이 설치 확대에만 나설 게 아니라 시민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성능 개선이 필요</p>	<p>* IEEE(전기전자기술자 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ac</p> <p>→ 높은 속도의 근거리 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된 무선 컴퓨터 네트워킹 표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일간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한 결과 접속건수 74만 건에 약 12,700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 6천5백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절감하고 있음 • 무선으로 통신하는 와이파이는 동시 접속하는 사용자 간 한정된 인터넷 대역폭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용자의 동영상 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속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와이파이 존 내의 장애물, 중계기와 단말기 간 거리,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단말기 상태, 접속자 수에 따라 인터넷 속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개시 전 2019. 11월 한 달간 충분한 시범운행을 거쳐 와이파이 품질을 검증하였으며 2020. 1. 20. ~ 21(2일간) 대전역 지하상가의 와이파이 이용률 최대수치 속도와 접속을 점검한 결과 LTE 속도(40Mbps)보다 빠른 60Mbps 이상(최대 430Mbps)의 다운로드 속도가 나왔으며 접속도 원활하였음. • 현재 무선 인터넷 속도에 대한 서비스 품질 기준은 없으나, * 고화질 동영상을 끊김 없이 재생 가능한 인터넷 속도는 최대 6Mbps임을 고려하면 60Mbps 이상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느리다고 할 수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화질(Full High Definition) 해상도: 1920*1080 * 향후 서비스지역의 혼잡도 등을 고려 중계기 위치 및 감도 조정으로 운영코자 함. • 엑스포 시민광장 한 가운데는 시민들이 자전거와 인라인을 즐기는 공간으로 핸드폰 사용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민광장 외곽의 벤치 5곳과 한밭수목원 잔디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광장 16곳 등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무선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1곳에 설치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에 설치한 300개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600개소와 시내버스 1,030대를 대상으로 공공 와이파이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트래픽, 장애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능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음 향후 시민들의 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터미널, 버스 정류장, 다중이용시설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소외지역 위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2020. 1.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수련마을,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사실관계 - 정부 요청없이, 주민동의도 구하지 않은 시의 일방적 지정 결정 - 정부가 이번 국내송환되는 우한교민 일부를 분산수용 준비 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요청없이 시가 일방적 지정 결정? ☞ 격리시설 지정은 메르스사태 이후 2018. 3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각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토록 되어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3(2018. 3. 본조 신설)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 지정 결정? ☞ 격리시설은 접촉자 중 증상이 없어 의료기관 격리는 불필요하고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 등이 다수 발생하는 등 긴급사태시 시설임. ☞ 법에 의해 지정토록 되어 있을 뿐 주민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님 정부가 이번 국내 송환되는 우한교민 일부를 분산수용 준비 의심? ☞ 우한폐렴 사태와는 별개로 작년(2019. 11)에 이미 격리시설 지정 ☞ 따라서, 우한교민을 분산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 불안할 필요없이 안심해도 됨. 왜 청소년수련마을인지? ☞ 격리시설 지정은 공공연수시설(수련원, 연수원 등)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 접근성, 독립건물 시설, 각 방마다 샤워실 등 구비 등 기준 ☞ 우리시에는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마을이 해당되며, 인재개발원은 충남대병원과의 접근성, 시설기준 미달(각방 화장실 등)로 제외 	보건복지국 위생안전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0. 2.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택시 뒷좌석 결제 시스템 뒷집 - 대전시, ‘뒷좌석 결제시스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 “카드나 휴대전화를 주고받는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 운수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데도 예산 타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비용*(약 9 ~ 10억 원) 및 이후 운영비**(연간 약 3억 원) 과다 소요 * 프로그램 개발비, 제작비, 설치비 등 / ※ 내구연한 7~8년 ** 결제시스템 이용에 따른 비용으로 결제시스템 운영사(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월 3천원 × 8,658대 × 12개월) 현재 ‘앱 미터기*’ 개발·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뒷좌석 결제시스템 설치해도 2~3년 안에 사용 중단(폐지) 예상 *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거리 산정 및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이 표시되며,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결제 가능 카카오택시, 티맵 택시 등의 경우 목적지 도착 후 등록된 카드로 자동결제(앱 결제) 됨에 따라 뒷좌석 결제 시스템 불필요 ※ 우리시 거의 모든 택시가 카카오 및 티맵 콜 서비스 제공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설치 기피 / 팔걸이 주변 설치로 청소 불편 ※ 서울시 외에 택시 내 뒷좌석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지자체 없음 택시업계 및 시민들의 설치 요구가 없는 상황으로, 뒷좌석 결제시스템 도입보다는 앱 미터기 보급 추이를 보면서 향후 개선된 결제시스템(앱 결제 등)을 우리시 택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2020. 2.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램 노선에 대전역, 동구·유성구 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이 빠져 있음. 이는 1996년 도시철도 1, 2호선 기본설계 당시의 계획을 고수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와 이용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램노선은 1996년 도시철도 1, 2호선 기본계획 수립 당시 현재와 같은 노선안을 마련하였음 - 이후 2014년 12월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결정한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2016. 7월 2호선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2016. 9) 등 시민과의 합의를 거쳐 2016. 10월 최종 결정한 것임 트램 노선에 대전역, 동구·유성구 터미널 등을 경유하지 않는 사유는 ? 	트 램 도 시 광 역 본 부 트램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들과 대전역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검토한 바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통수요와 경제성 면에서 현행 노선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② 노선변경으로 발생하는 기대효과보다 1996년부터 시민과의 약속, 행정의 일관성·연속성 등을 고려, 그동안 추진해온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노선과 같이 결정한 것임 • 다만, 대전역 등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할 계획임 	
2020. 2.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역할은? 설립전부터 우려 커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 전부터 역할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출연연이 대부분 국가 기관으로 감독이나 재정 권한이 없는 지자체 기관의 한계가 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 - 향후 진흥원 조직 구성원이 자치단체장의 자리 늘리기 수단 악용 및 설립 후 없애기가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지역은 과학기술 혁신역량지수는 높은 반면 사업화는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별 평가(2018년)에서 인적 및 지식자원(3위), 연구개발 및 창업 활동(2위), 교육·문화 인프라(1위)인 반면 산학연 협력 및 기업-정부간 협력 네트워크와 그에 따른 성과(15, 16위) 최하위 ※ ‘2018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평가’ (2018.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윤중, 천세봉외) • 중앙의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기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위 중심으로 지역은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은 가이드라인 제공,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 움직임 ⇒ 대덕특구기반의 대전과학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주요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중앙 및 지역 사업 정책·전략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방향제시 •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사업 적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용 모델 개발하여 지역 출연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계에 방향 제시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산하기관을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을 통한 성과확산의 진행상황을 체크 및 결과를 공유하고 계획에 반영 등 ⇒ 우리 지역의 발전 방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과학산업의 발전 효과를 최대화하고, 인적 및 지식자원 인프라를 지역 사업(산업, 창업 등)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앙 정책과 지역 산업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 부서의견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인프라와 사업의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미래 정책기획을 통한 미래 과학산업의 발전 방향제시 및 중앙 정책기조에 부응 등 선택이 아닌 필수 - 이미 부산과 광주에서 유사기구가 발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진흥원 조직이 일자리 늘리기 수단이나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 촘촘한 기획과 대덕특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흥원 설립 추진 	
2020. 2.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경마장 폐쇄 대책없는 대전시 - 대전마권장의발매소 폐쇄 후 시 자체 건물매입 부담 - 주변상권 붕괴우려에 대한 상권활성화 대책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매입) 월평동 마권장의발매소(화상경마장) 해당 건물은 한국마사회가 소유자로, 「공공기관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입찰 매각을 표명하는 등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임.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화상경마장 폐쇄 후 해당건물이 공실되지 않도록 시 산하기관·기업 입주 등 수요 파악 등을 통하여 한국마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음 • (상권 활성화)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는 대전마권장의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 활용과는 별개 문제로 전반적인 골목상권 침체에 따라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변상권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 경 제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0. 2.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탄진 철도변 주민들 “소음·진동·사고 위험” 호소 – 대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횡단보도 지역 주민들 철로 소음, 진동등 불편사항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 하였으나 진행된 사항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인입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과 철로 주변 각종 소음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공동으로, 2018년부터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사업이 완료 되는 2022년에는 인입선과 국 도 17호선 등 도로와 접속되는 건널목이 폐쇄되어, 철로 주변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 	도 시 재 생 주 택 본 부 도시정비과
2020. 2.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폐지하보도 10년 넘게 방치 – 보행자가 지하로 길을 건너도록 만든 지하보도가 10년 넘게 문이 닫힌 채 방치 – 대전지역내 20개 지하보도 중 3곳이 장기간 폐쇄된 상태임 – 서울시는 지하정원을 조성하여 이용 중이며 충선 공약으로 문화창작소 방안이 제기되는 등 폐지하보도가 지역문화와 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나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지하보도 20개소중 5개소(시청, 동지, 둔지미, 태평, 정부청사)가 폐쇄중이며, 폐쇄된 5곳 중 둔지미·태평 지하보도 2개소는 시민 공공자전거 보관·수리 및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는 등 보행자 위주의 도로 만들기가 도입되기 시작하여 지하보도 이용자들이 통행 편의를 위해 지하보도 인근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됨에 따라, 지하보도 이용객이 감소되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및 범죄 우려로 인해(경찰 의견) 지하보도 폐쇄를 결정하였음. • 앞으로, 타부서 및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자연재난 대비 빗물저류조 또는 둔산센트럴파크 사업의 연결통로 등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2020. 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는 ‘우왕좌왕’ 보행자는 ‘안절부절’ – 왕복2차선도로-왕복7차로 대로 신호체계 미흡 – 좌회전 신호도 없어 교통체증보행자 위험도 상승 – 주도로인 대전로의 과다한 교통량으로 인하여 부도로 골목길에서 특정시간대 진출입시 교통이 어렵고 자정체 현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복 7차선 대로(대전로)와 접해있는 부도로인 오정로78번길은 왕복2차로, 대전로1142번길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주유소, 카센터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임 • 신호체계 상 좌회전 신호 부여 시, 부도로의 사전 도로정비(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중앙선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 및 민원 발생 상존 	교통건설국 공 공 교 통 정 책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에 인근 주민들의 신호개편 의견 불일치로 논의에서 중지됨 •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대덕구와 함께 인근 상가 및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지방경찰청,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 비보호 좌회전 → 신호 좌회전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추진코자함 	
2020. 2.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신천시 시설 폐쇄 ‘현장 상황과는 달라’ - 관련 시설 31개소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하는데 일부시설 폐쇄 안내문도 없고 문만 닫혀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천시 시설이 공개되지 이전인 2. 20. 신천지관련 모든 시설에 대한 폐쇄 여부를 신천지측에 확인한 결과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내부 방역소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 • 이에 시에서는 자치구 행정팀장 회의를 개최(2.22.)하여 실질적인 폐쇄 여부를 10개 정도 임의조사를 하였고 실제 폐쇄를 확인하였음 • 신천지측에서 전체 시설을 공개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시가 조사한 10개소가 모두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측의 주장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이후 신천지측에서 전국 시설에 대한 자료를 공개 하였고, 시는 25일 신천지 공개자료를 기초로 전체 시설 폐쇄여부를 재차 확인하였고 확인결과 모두 폐쇄된 것으로 확인함 •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서 2. 24~2. 25.까지 신천지관련 31개 시설의 주변에 대해 1차 소독 실시를 완료하고 • 2. 24. 대전맛디아지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임시폐쇄 및 집회 중지 요청 공문 발송(자치분권과-2704호) • 2. 25. 오전, 신천지대전교회에서 31개 시설에 대한 내부 소독 동의(핸드폰 카톡으로 의사 전달)하여 • 2. 25. 15:00, 정무부시장과 신천지 문화센터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자치구와 함께 31개 시설 내부소독, 포교활동 금지,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 신도명단 제출 요청 • 2. 25. 부터 신천지 31개 시설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였고 2. 27. 31개 시설에 대한 내부·외부 소독을 완료함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0. 3.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예당 채용 특정자격 요구 논란 - 대전예술의 전당 임기제 직원채용이 때마다 달라지는 자격요건에 특정인 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올해 대전시가 실무경력 범위를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공연기획 및 제작 등 실무경력으로 제한함 - 이에 일부에서는 대전예당과 연정국악원 근무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어 자격요건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제기 	<p>직원채용 자격요건은 해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에서는 직원채용 자격요건이 때마다 달라지고, 올해 실무경력 범위를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실무경력으로 제한 했다고 주장하나 - 우리시는 최근 5년간 동일한 기준(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실무경력)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음 ☞ 자격요건이 때마다 달라지고 올해 실무경력을 제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장은 전국 1,024개소(대전 57개소)가 있음 - 보도에서는 대전시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실무경력으로 제한하면서,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에 근무하는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은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등 대전에서만 57개소, 전국 1,024개가 있음 ☞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 근무 직원만 응시가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해당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해명하였으며,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인 사 혁 신 담 당 관
2020. 3.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미술계 숙원사업 코로나 폭풍속 표류위기 -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개방형 수장고” 건립 착공 앞두고 설계심의 무기한연기로 공사 지연 우려 - 행정절차도 산적...UCLG 총회 맞춘 완공계획 무산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보도에서는 수장고건립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가 코로나사태로 지연되어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나, 건설기술심의를 위한 설계내역서 조정으로 건설기술심의신청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을뿐 이로 인한 공사추진 일정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음 ☞ 본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심의등 행정절차는 시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진행토록 할 예정임. • 개방형수장고 건립공사는 2021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임 	시립미술관 관 리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에서는 UCLG 총회 맞춘 개방형 수장고 완공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건립공사 착공이 1~2개월 지연되더라도 준공일시에는 영향이 없음. 	
2020. 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와 보행자 뒤섞여 혼잡 불보듯..안전사고 우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평가에서 녹지관련 사안 무관심 - 자전거도로 설치 차단은 위험한 결정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청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녹지관련 사안에 대해 무관심한 건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지난 ‘20. 3월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가로수 식재로 인한 보도폭원 3m→2m 축소로 심의요청(서구청→대전광역시) - 서구청 민원사항으로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 • 교통영향평가심의 사전검토과정에도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애물존 설치 등 심도 있는 검토(불입참조) • ‘19.10.16. 「2019년제3회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요청으로 공공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도시정책과 등 가로수 식재에 대한 문제점 제기 • ‘몇몇 전문가들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 16년 건축·교통통합심의(주택정책과) 과정에서도 탄방로 구간에 대하여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음.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는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보도만 설치된 구간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행이 불가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소 보도폭원 2.0m 확보됨을 감안하여 보행자와 차량간 분리 및 완충역활과 도시경관등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 	교통건설국 공공교통정책과
2020. 4.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장대교차로 입체화 의지 있나 없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대교차로 입체화해야 교통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삼~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BRT 연결도로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택(2011년)에 반영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 	트램도시 광역본부 도시광역 교통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입체→평면교차로로 변경하여 혼란 자초</p>	<p>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1,284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대전시는 2014. 2월행복청과 위 공사에 관하여 행복청은 기본 및 실시설계, 대전시는 보상과 공사를 각각 전담하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행복청은 2016년 7월 BRT의 정시성 확보 및 주간선도로가 교차되는 곳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장대교차로를 입체화로 계획하여 총사업비를 1,439억 원으로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차 완료하고 위 지침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제출(당초 1,284억 원 → 변경 1,439억 원(증 155억 원))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2016년 9월 당초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행복청에 통보하였습니다. • 사업비 증액은 관련 규정상 불가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입체교차로 대신 2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총 12개차로로 평면교차로를 운영할 경우 교통지체도가 126.9초에서 61.5초로 개선되고, 입체교차로(58.7초) 대비 2.8초 지체되는 결과가 도출되어 관련 규정상의 교통서비스 수준(D)을 확보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 장대교차로와 연결하여 진행중인 장대 공공주택지구(LH시행)에서도 평면교차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마찬가지로 같은 교통서비스 수준(D)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교차로구조개선을 통한 평면교차로를 운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고, 특히 열악한 우리시 재정 여건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증액되는 사업비를 순수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 또한, 2017년 12월 행복청과 대전시 국장급 회의에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입체교차로에 대하여 지역단절,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토지이용의 비효율성, 고가도로 주변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목표연도인 2030년 장래 교통량에 대한 교통서비스 분석 결과 입체교차로와 같은 수준으로 예측되어 최종 결정된 사항인 만큼 교차로 방식의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결정하였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감사결과 평면교차로 결정의 절차 및 법령 위배와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교차로 서비스 분석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더 이상의 논란은 공사 지연, 행정의 신뢰성 저하, 행정력 낭비, 업무 혼선만 초래하고, • 우리시 교통행정의 패러다임이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서울시 및 부산시 등 타 도시의 철거 사례를 보듯이 자동차 중심의 산물인 고가차도는 없애는 추세이므로 특단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현재의 계획대로 평면교차로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다만, 2022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시기에 맞춰 BRT 도로를 우선 개통하고 난 후 교통량의 변화로 입체화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0. 4.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나한테 돈 주지” 받은 사람도 황당한 ‘대전형 재난지원금’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불합리한 지급자 속출 - 수령자 A씨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형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기준일 2020. 3. 24)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 • 지원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정하고 중앙정부 보다 먼저 시행하게 됨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집행 필요성, 자료의 최신성, 기준의 안정성과 포괄성(전시민 대상)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으로 정함 • 국민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피양부양자 조건*은 아래와 같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적용 대상 등)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 경 제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요건 : ①소득 합계액* 연간 3,400만원 이하 ②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 ③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재산요건 : ①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②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 다만, 예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 따라서 수령자가 예금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됨. • 아울러,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안내전담창구 설치, 온라인 전담인력 운영(98명), 사전 홍보, 예산집행 등 자치구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0. 4.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취약계층 끼니 해결 막막 - 대전지역 무료급식소 26곳 현재 모두 운영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2월 초부터 집단급식은 중지하고 하루 평균 2,877명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음 ※ 경로식당 26개소(동구 9, 중구 6, 서구 5, 유성구 2, 대덕구 4) • 도시락으로 배달 및 수령하여 집에서 드시도록 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성도 방지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소독제 배부 완료 및 2인 1조로 경로식당 2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종사자·대상자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어르신은 외출을 꺼려하시어 집에서 스스로 해결하시는 분도 있으며, 경로식당 집단급식 여부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 예정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0. 4.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은 대전, 떠넘기지 맙시다 - 임신부 마스크 1차 지원 때는 받았는데, 2차 지원에는 못 받아 - 동행정복지센터-구청-시청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 마스크 지급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책으로 도입 추진하였음 ※당시 마스크 대란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시기였음 • 1차 마스크 지급은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3,174명과 미등록 임신부 예비분(등록임신부의 50%)을 포함하여 배부한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을 통하여 임신부에게 1인당 5매씩 지급하도록 하였음 • 보건소 등록 임신부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통해 직접 배부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미등록 임신부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산모수첩 등 임신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토록 하였음 • 이를 통해 총 3,840명에게 1차적으로 지급을 하였고, 추가 지급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4월 초 2차 배부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구를 통해 1차 지급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에서 직접 각 가정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배부하였음 ※ 4월초는 대전형생계지원금 지급과 4.13총선업무 등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가 폭증하여 등기우편을 통해 배부하기로 결정함 •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은 총 3,682명으로 1차 지급대상자보다 158명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1차 배부시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급받은 임신부중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이름 등만 기재한 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주소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였음 ※산모수첩을 통해 임신부 여부를 확인 후 이름만 기재하였거나, 세부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158명 이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예비분 마스크를 추가 배부한 후, 미수령자가 방문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언론 등을 통해 수령받지 못한 임신부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토록 홍보하였으며, 개별 문의시에도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토록 안내하였음 	
2020. 5.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NGO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는 시대 역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개편을 하면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여성가족국으로 전환 - 성인지 정책 기획과 조정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개편은 성인지정책담당관(4급) 폐지가 아닌 여성가족국(3급)을 신설, 성인지 정책을 총괄하는 성인지정책과(4급)로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확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정책, 양성평등정책, 여성가족정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정책 속에 사업 부서로서 기능보완이 필요하였음 이번 개편으로 전담국을 신설, 국장 책임하에 성인지 및 양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과 여성, 유·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사업간 성인지 중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여성고용·차별개선, 일·생활 균형 업무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 	정책기획관
2020. 5.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7월 조직개편, 감염병 대응은 빠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조직개편에 감염병 전담조직이 빠져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늦어진다는 지적 - 여성가족국은 2년 동안 한시적 기구로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개편에 감염병 전담조직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코로나 19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음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시·도에 감염병 관련 부서도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 신설을 검토 중임 신설되는 여성가족국은 기한이 정해진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율신설기구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설치 후 2년 이내에 자체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한 유지되는 상시 기구임 	정책기획관
2020. 5.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산에도 뒷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교생 단계적 등교로 버스 안 승객 과밀, 코로나19 확산 우려됨 - 타 시도, 마스크 미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홍보하였음 - 시내버스 내부 안내방송, 전면 LED 문자 표출, 하차문 홍보물 부착 - 운수종사자의 시내버스 탑승객 마스크 착용 안내 유도 협조공문 발송 / 3회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시민은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마스크 미착용 시민에 대한 시내버스 승차 거부 등 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홍보 보도자료 배포(5.21.) -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마스크 착용 필수’ 홍보물 추가 부착 - 운수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독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서비스평가 미반영 통보(5.14) • 우리시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 시민 탑승 시 운수종사자 현장 안내 강화 및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하기’ 캠페인 전개와 출·퇴근시간 에어컨 가동 및 수시 환기로 버스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버스 이용승객 전원 마스크 의무 착용 계도 및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2020. 5.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양지 논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원장 개방형 공모제 또 물거품 - 재임기간 짧고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 갈등 점차 증폭 - 공연장 가동률과 객석 점유율 및 수익률 지속 감소 - 국악원 명칭 변경 두고서도 내부 혼란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원장의 재임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2017.7.1. 부임한 원장부터는 1년 6개월간 재임하고 있고 행정업무 능력 및 추진력이 있는 원장을 발령하고 있음. ※ 소재문 원장(2017.7.1.~2018.12.31.), 송인선 원장(2019.1.1.~2020.6.30.) • 공연장 가동률 및 객석점유율, 수익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공연장 가동률: 2017년(32.9%) → 2018년(39.2%) → 2019년(53.2%) ※ 객석점유율: 2018년(73.9%) → 2019년(76.8%) ※ 수익률: 2017년(56백만원) → 2018년(63백만원) → 2019년(82백만원)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市 사업소로서 시민을 위한 공공 공연장을 운영·관리하는 업무와 市 소속 예술단체인 국악연주단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음 • 대전시립연정국악원(市 사업소)에서 국악연주단(市 소속 예술단체)의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형태로 국악연주단 내에 기능별로 연주단(기악)·성악단(성악)·무용단(무용)으로 부서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국악연주단 공연의 프로그램 구성 및 출연 게스트 선정 등은 국악연주단 예술감독이 모든 진행을 하고 있으며,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국악원장은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의 결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악 연주단의 작품 활동은 독립적,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에 관람료, 수강료 등 국악원(市 사업소)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과 단원 채용, 복무 등 국악연주단(市 소속 예술단체) 관련 조문이 섞여 있어 명칭과 조문에서 오는 모순점(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개정이 진행 중 ※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단 조례(안) •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단 조례(안)로 개정하고 국악단을 기능별로 연주단·성악단·무용단으로 구분하여 ‘연주’라는 단어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하였고, 단원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진행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합리적인 방향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백과사전(Daum 백과)에 ‘연주’는 음악적 사고가 실현되고 청자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음악과정이라고 되어 있음. 엄밀히 따지면 현재 연주단(가야금, 거문고, 대금, 타악 등)은 악기를 연주하는 부문으로 기악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임. 	
2020 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대동 도시첨단산단조성사업...그린벨트 해제가 발목 잡았다 - 대전시는 장대동 도시첨단산단 10만3517㎡부지에 GB 해제에 따른 보전부담금 (29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획 - 국토부의 훼손지복구계획 재검토 요청 - GB해제 면적과 같은 크기의 부지를 훼손지복구하여야 하나, 면적이 적정한 후보지의 경우 비용이 보전부담금을 초과 - 훼손지복구 대상지를 다방면으로 물색하겠다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이하의 GB해제를 위해서는 훼손지복구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훼손지복구제도는 GB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GB해제대상지역 이외의 GB 내 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녹지 기능으로 복구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따라 GB 해제 시,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해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10km이내에 복구할 훼손지가 없는 경우 관할 구청장 및 국토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임 • 보전부담금은 국비로 귀속되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산권 등 7대 	도시재생 주택본부 도시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개발제한구역권역의 주민지원사업과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게 되는 반면, 훼손지복구계획은 우리시의 훼손지에 오롯이 전액 투자되는 것임</p> <p>※ (참고) 대덕구 연축지구 훼손지 복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 조성 25,801㎡(GB 해제면적의 11.1%) / 사업비 : 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조성 : 장동 문화공원 A=18,800㎡ / 19억원 - 녹지 조성 : 연축동 289 일원 A=7,001㎡ / 21억원 • 또한, GB 해제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장대동 도시첨단산단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준비 중에 있는 등 GB 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정에 맞추어 훼손지 복구대상지 확보 등 추진 계획임 	
2020. 6.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유승기업사에 특혜 VS 市 ” 아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어리샘 조합) ① 2010년 도심지에 있는 4곳 기업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유승기업사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조합은 법적 진입폭을 3배 이상 확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16,648㎡)와 공공보행통로(1,831㎡) 설치 등 많은 기부채납을 했으며, 구역계 외(계통로 500번길 일부) 부지매입 강요 부당 - (市) 유승기업사 용도지역은 주변지역을 감안한 결정임(대지 분할가능선을 두어 건축 및 용적률을 규제함) • 탄방1구역 재건축 갈등 해결책으로 유승기업사 기부채납 따른 혜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市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의 입지가 불가하여 관내 4개소 정비공장은 2010년 5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현대자동차와 삼화공업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충남공업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승기업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986.9.주거→상업: 건축법 개정으로 주거지역에 정비공장 불가 ② 1991.7.일반상업→근린상업: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③ 2010.5.상업→준주거: 국토법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에 정비공장 불가 • 유승기업사는 다른 정비공장과 달리 인접된 계통로 맞은편과 서측도로 건너편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써, 2010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용역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부합하여 변경되었음 	도시재생 주택본부 도시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어리샘 조합) 도로확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승기업사 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받고 용적률 건폐율 제한 완화 -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시 대전시 조례 개정 필요 - (市) 해당방안 적용은 불가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도로확장 문제해결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에서는 공공조경 공간(1,608㎡)과 서측도로 측 먼한 부분에 폭 16미터 대지분할가능선을 두어 건축은 물론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토록 하는 등 용도지역 변경 대비 적절한 공공 기여와 개발규제를 하였던 사항임. • ‘19년도부터 유승기업사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20.4.24.)을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은 현 조례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기 결정된 사항임. • 또한, 승어리샘 재건축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이 과도하다는 주민의견과 관련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 총면적은 16,288㎡이나 사업부지로 사용되는 사업 구역 내 기존 공공 시설 면적 14,550.8㎡를 제외하면 1,737.2㎡가 조합에서 제공하는 순수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해당 - 그런데, 순수 공공시설 1,737.2㎡ 제공에 따라 용적률 5%(건축연면적 4292㎡, 전용면적 59㎡ 주택 건설 시 51호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 면적)가 건축계획 시 인센티브로 제공되었으므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면적이 과도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음. • 아울러, 구역계 외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본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을 감안, 구역계 외 도로확장을 조합이 신청했던 사항이며, • 우리시에서는 유승기업사 서측도로 변 도로확장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에도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2020 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통대전 고액·단순결제수단 전략 우려 -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캐시백을 위한 고액소비 및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략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매출증대보다 의료비와 학원비 등 비생계형 고액지출업종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가 발행하고 대전광역시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임. • 현재 전국 200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사용처를 운영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통대전은 출시 후 2개월이 되지않은 7.5.(일) 현재 발행액이 1,630억원을 달성하였고 1,300억원이 이미 우리 지역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온통대전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온통대전과 사용처가 유사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주일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3.3%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으며 • 경기연구원 발표사례(' 20.6.10.)에 의하면 지역화폐를 취급하는 업체의 매출이 지역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보다 10% 이상 추가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사용업종은 코로나19 생활환경이 반영된 일반음식점, 소매 등 5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나 보도된 바와 달리 평균 결제금액*은 소액이고 주로 생활 주변의 골목상권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온통대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 추가로 캐시백 요율 조정과 차등 적용 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온통대전의 소비형태를 분석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2020. 7.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수장고 지연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연 - 보완사항 있어 행정절차도 발목 - 2023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 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준공 목표 시기에는 당초와 변동이 없음 	건설관리본부 시 설 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언론보도에서는 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증축 설계용역이 중단되어 2023년 상반기에 제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UCLX(기사 본문에는 2021년 10월이나, 실제 2022년 10월 개최 예정임) 개최에 맞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p> <p>☞ 설계용역 중단 보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협회의 등의 일련된 행정절차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정지 상태로 (건설기술심의는 득하였으며, 심의 등의 소요기간은 용역기간 미포함), ▲ 장애인편의시설 추가 설치(BF 인증 비대상) ▲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 보완 중에 있으며, 건축협회가 완료되는 대로 용역재개 등 후속절차 진행예정에 있어 준공 일정 등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음</p>	
2020. 7.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에서도 수돗물 유충 신고 “벌레·물 표본 정밀 검사” - 대전시 괴정동 다기구 주택에서 수돗물 유충으로 추정되는 벌레를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본 수질 검사와 환경 조사를 진행했고, 벌레와 수돗물 표본을 가져가 정밀검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일 대전 서구 가정집에서 발견된 유충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한 결과 ‘나방 파리 유충’ 이라는 사실을 21일 확인함. 주로 화장실, 다용도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나방파리는 하수구 등에서 성충으로 올라오면 욕실이나 화장실 바닥의 고인물에 알을 낳아 번식. 이 때문에 간혹 수돗물에서 나온 유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돗물에는 염소 소독 후 남은 잔류 염소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공촌정수장 입상활성탄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송촌정수장에 대해 지난 17일 금강유역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정수처리 공정에 대해 점검하면서 입상활성탄 내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했으나 유충 등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음. 송촌정수장은 창문과 출입문에 방충 설비를 설치하고, 연중 오존처리시설을 가동해 벌레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유충 발생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입상활성탄 여과지의 세척주기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기 술 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6일로 단축, 오존과 염소투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모래사 여과지를 사용해 합동 점검에서 제외됐던 월평과 신탄정수장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자체 점검을 통해 여과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2020. 7.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밭춘추] 대전의 영상산업 현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단 폐지 - 대전영상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2년간 회의가 단 한번도 없는 유령위원회로 전략 - 대전비주얼아트테크 2019 시상식 대부분 대리수상 - 관람학생 80% ~ 90% 잠을 자는 해프닝 - 대전비주얼아트테크 행사 기대효과 및 추진이유 의문 	<p>◇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단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영상사업단은 지역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위원회 업무와 우리시가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준비해 온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예타사업’을 주요업무로 추진해 왔음. 영상사업단이 대전영상위원회 사무국으로 개편(2019.11. 1)되면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예타사업’을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진흥원 콘텐츠사업단 내 별도 융복합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이관함 따라서 영상사업단이 폐지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롭게 개편된 대전영상위원회 사무국은 기존 근무 인원 변동 없이 “지역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만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조직을 강화한 측면이 있음 <p>◇ 대전영상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2년간 회의가 단 한번도 없는 유령 위원회로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기 영상위원회는 2019. 7.18(금),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2020년 3월 4일 제 7기 영상위원회 (총 23명, 당연직 3명, 영상위원 20명)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위원회 회의는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때 코로나19 진정세로 7월 회의개최를 계획 했으나, 최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8월 개최로 연기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음. 제7기 영상위원회 위원수도 기존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였고, 	문 화 체 육 관 광 국 문화콘텐츠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위원도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주로 위촉하였음</p> <p>◇ 대전비주얼아트테크 2019 시상식 대부분 대리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2019 시상식은 5개 수상부문, 총 7개팀이 수상하였고, 이중 2개팀만이 해외활동 사유 등으로 대리수상 하였음. - 비경쟁 부문은 글로벌 부문으로 주로 해외활동 아티스트가 수상 대상이며 수상자 김상진 아티스트(주도피야, 모아나, 레드슈즈 등 참여)의 경우 해외활동으로 부득이 불참함. - 경쟁부문 수상자 영화<물괴> VFX 팀(박준영 외 7인)의 경우 해당 팀 의 영화작업 참여로 불가피하게 수상팀의 슈퍼바이저 ‘박상진’ PD 가 대리 수상함 <p>◇ 관람학생 80~90% 잠을 자는 해프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비주얼아트테크 2019 행사 1, 2부 진행 과정 중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80 ~90% 학생들이 잠을 자는 일은 없었으며, 이는 행사 진행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자료들이 뒷받침함. <p>※ 2019 공식홈페이지 성과(가입자 2,445명, 누적방문자 7,488명, 페이지뷰 50,223건)</p> <p>◇ 대전비주얼아트테크 행사 기대효과 및 추진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 대전비주얼아트테크 행사는 “특수영상콘텐츠”라는 차별화된 영상산업 분야의 행사로 지역 내 차 세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국내 특 수영상산업 도시 대전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함 - 기간: 2019.11.21.(목)~11.22(금), 사업비: 3억원 - 내용: 영화·드라마 특수영상 시상식, 세미나, 상영회, 전시체험 행사 등 행사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훌륭한 작품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 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각종 세미나 및 체험행사 등을 진행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비경쟁 부문) 총 423개 후보작 대상, 1차 22작품 선정 / 최종 7개 작품 선정·시상 - (일반인 부문) 총 80개 작품 신청, 15개 작품 선정·시상 - (세미나) VFX란 무엇인가?(위지웍 이덕우 실장) 등 3회 진행 - (상영회) 영화 “물괴” 아티스트와 관객과의 만남 / 담당PD 등 참석 - (체험행사) 가상현실, 특수분장 체험, 공포체험 등 • 기존 영화제와 다른 행사임에도 일반인 대상 영상 공모전 호응이 높아 80개 작품이 접수되고, 관람객 높은 참여율은 큰 성과임 - 행사 참여인원 1,200명, 홈페이지 가입자 2,445명, 방문자 7,488명 • 본 사업은 특수영상 분야에 특화된 한국 최고의, 유일한 차별화된 시상식으로 감독, 배우가 아닌 현업 시각 효과 아티스트 대상으로 하여 진행 중인 행사임 • 또한 기재부 예타 심사 중인 우리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도 부합 ☞ D-Artch Awards 수상자 수상소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우리들의 일(영화, 드라마의 CG, VFX 작업 등)에 대해 이런 시상식을 통해 그 노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다” 	
2020. 8.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 없는 대덕특구 미중물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광역시와 중앙부처(과학기술부, 기재부)와의 이견으로 오픈플랫폼 기획예산 3억원 삭감 - ETRI융합기술연구생산성센터의 시너지 효과 부족 및 대덕특구비즈센터 등 유사공간과 중복성 및 기능이 추상적이고 모호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이고 촘촘한 운영방안 등 명확한 목표와 장기로드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미중물 사업은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의 지역경제투어 대전 방문 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적극 지원 약속 아래, 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단기 선도사업*으로 추진 *융합혁신센터 구축, 출연연 오픈플랫폼, 첨단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테마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 정부출연연 오픈 플랫폼 구축 기획 예산 3억원 삭감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300억원(국비 50%, 시비 50%)으로 '19년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정부예산에 종합기획비로 3억원 (국비1.5, 시비1.5) 요구하였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심의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의 도움으로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사업명을 “국제R&D 오픈플랫폼 종합기획비* 로 변경 - 이후 과기정통부는 국제R&D기능 으로 추진을 요구했으며 기재부는 지역기업 지원기능과 의견을 같이하여 지역기업 기술사업화 거점공간 으로 조성 요구 -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우리시의 “국제R&D + 지역기업 지원”이라는 양보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지난 7월 정부 3회 추경에서 종합기획비 3억원 삭감 - 이에 우리시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출연연 오픈 플랫폼 (가칭 마중물 플라자 조성사업) 예산을 새로 편성하고자 함 <p>▶ ETRI융합기술연구생산성센터 등과 유사(중복), 기능이 추상적이고 모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플랫폼은 특구 내 정부 출연연의 혁신자원을 지역의 기술 사업화 플랫폼으로 특구내 출연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반영 <p>*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 23개소 중 15개 기관 오픈플랫폼조성 희망 (열린실험실 7개소, 과학기술체험장 4개소, 복합공간 1개소 박물관 2개소, 전시홍보관 2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특구 내에 우리시가 조성(또는 재원부담)하려는 과학기술 인프라는 모두 3개소로 우리시는 각각의 용도와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덕특구 융합혁신센터) 특구전체의 융합연구와 기술사업화 • (마중물 플라자) ETRI중심, ICT·AI 기술사업화 및 소통교류공간 • (공동관리아파트) 대덕특구의 상징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조성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대덕특구는 저효율의 교외형 연구중심단지 형태로 조성되어 기술사업화와 비즈니스가 활발히 진행되는 판교형 글로벌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선도적인 혁신거점이 필요함 ▶ 세부적이고 촘촘한 운영방안 등 명확한 목표와 장기로드맵 부족 - 우리시는 당초 융합공동연구를 위해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를 조성하고 대덕특구와 협업 및 오랜 기간 방치된 해외 과학자 유치정주시설을 재개발하기 위해 각각 오픈플랫폼과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에 시비 50% 투자를 결정하고 차분히 사업을 추진 중임 • (융합연구혁신센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과학기술계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도출 중 • (오픈 플랫폼 & 공동관리아파트) 향후 기본계획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여론을 수렴, 연구현장 문화와 연구자 의식이 담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우리시는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과제 추진을 통하여 초기 혁신거점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재창조 방향을 달성해 나아갈 계획이며 “점→선→면”의 확대전략을 통하여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고효율의 비즈니스공간으로 탈바꿈해 갈 계획임 	
2020. 8.1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반쪽 출범 우려 • (충청투데이) 인력부족한데 DISTEP파견까지.. 걱정커진 출연연 • (중도일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준비 소홀? <p>①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과학산업진흥원(이하 ‘DISTEP’)의 출연연파견 인력 (7명)에 대한 관련기관 간 구체적인 합의 부재</p>	<p>①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과학산업진흥원(이하 ‘DISTEP’)의 출연연 파견 인력(7명)에 대한 관련기관 간 구체적인 합의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EP 설립 추진과정에서 출연연·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제도적 범위내에서 출연연 목적에 맞다면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 의견 - 「대전형 과학산업 기획 및 육성 전담기관 설립방안 계획」 수립 시 운영인력에 출연연·대학의 파견인력 7명을 목표로 계획 - 다만, 채용인력과 파견인력은 	과학산업국 과학산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② 출연연 인력도 부족한데 DISTEP 파견까지 부담</p> <p>③ DISTEP 추진과정에서 파견 시기와 역할, 인력 거취를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파견이 가능할지..</p>	<p>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총 정원 범위내에서 가변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효성 있는 파견을 위해 KISTEP, BISTEP 등의 전문가 자문 및 워킹그룹 운영, 간담회 등 진행한 결과, - 지속가능하고 유의미한 출연연·대학의 파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연연-대전시-국가를 아우르는 과제 발굴과 촘촘한 전략 수립이 우선이라는 결론* <p>* NST 출연연 파견, BISTEP의 대학교수 PM제도와 민간기업 파견제도 등 사례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오는 9월 임용예정인 원장과 직원(준비근무)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출연연-대전시 공동 아젠다 발굴 등 개별 출연연별 필요 파악과 구체적인 파견절차 협의 하고, 특히 인력파견도 정기, 비정기를 혼용하는 등 유연하게 추진하는 방안 적극 고려 <p>② 출연연 인력도 부족한데 DISTEP 파견까지 부담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의 DISTEP 파견은 당연히 의무는 아니며 개별 출연연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할 것임 - 특히 최근 출연연은 R&D 후 실증사업 추진 등 과제의 성격변화에 따른 지자체와의 협력가능성이 제고되고 있어 각 기관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추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견인력은 계획과 목표치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파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 <p>③ DISTEP 추진과정에서 파견시기와 역할, 인력 거취를 명확히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파견이 가능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과 대학이 DISTEP에 인력을 파견하고 DISTEP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DISTEP 정관 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양 기관의 필요에 따른 상호간 연결과 공동사업 구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협력관계 형성이 우선 - 우리시는 이미 일부 출연연과 협의를 통하여 원론적으로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등을 통한 자문회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임 - 출연연 인력활용은 DISTEP 설립 후 다양한 공동 세미나나 네트워크 사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인력파견부터 확정 되기는 곤란 - 또한 유의미하고 지속가능한 파견제도 운영을 위해서도 대덕특구 내에서의 DISTEP 역할과 존재에 대한 출연연의 인식제고 등 DISTEP에서 먼저 대덕특구와 부딪치며 교감하는 과정을 통해 출연연과 대전시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출연연 파견은 출연연이 밀집된 우리 시만이 시도 가능한 모델이므로 DISTEP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도 내년 1월 DISTEP 본격 출범 이후 DISTEP과 대전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 	
2020. 8.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등 설치했는데...3개월째 무용지물’ 왜? -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산e-편한세상)과 시공사 간 문제 - 아파트 준공(‘20. 4. 27.) 후에도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이관 서류가 시청(소관부서) 미접수 되어 교통안전시설 미운영 상태 - 시설물 관리이관 미조치에 따른 입주민 교통 불편 및 안전사고 상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관계 기관(준공 인허가 이전에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을 시공하였으나, 준공(후) 관리이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교통안전시설물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시정조치를 시행하였고 주택조합(시공사)의 처리 지연으로 입주민 교통 불편이 판단되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호 운영을 조치(임시) 하였음. • 이후, 주택조합(시공사)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물 미비사항 조치(2020. 8. 14.)가 완료함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시로 관리이관 조치(2020. 8. 18.) 하였음.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이관 개선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이행 의무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후) 인허가 기관 및 교통영향 평가기관(8개사)과 협의 하여 준공(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으로 준공(후) 시설물 관리이관 절차 축소와 준공(전) 교통안전시설물 이행 점검으로 주택조합(시공사)가 준공 후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이관 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여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 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경관조명 하천 서식 야행성 포유류와 조류, 곤충’에 위협. - ‘지난 장마 때 수해로 하천둔치에 설치된 시설물 다수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은 대전광역시 야간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시는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방사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 (조명환경 관리구역 제1종, 평균값 5cd/m²이하 / 최대값 20cd/m²이하)로 설계하여 추진 중 임. 대덕대교에서 둔산대교 구간은 가로등이 없어 야간범죄에 취약하고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 관할 경찰청 으로부터 개선요청이 있었던 지역 임.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에 설치 되는 조명은 하천으로는 불빛이 들어가지 않고 산책로에만 비추는 국부조명방식으로 하천생태계에 교란이 없도록 설계하였음. 또한, 산책로에 설치되는 조명은 통행량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절약형 조명으로 수증(방수지수IP68)에서 사용하는 방수 제품으로 설계되어 집중호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공할 예정입니다. 	도 시 재 생 주 택 본 부 도시경관과
2020. 10.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관 련 예술의 전당 사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애하는 직원여러분! 코로나 19와 여러 업무로 노고가 많습 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 안에 대해 직원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3월 대전의 한 공기관에서 비스 트한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는 더욱 신 경을 썼습니다. 	대전예술의 전 당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하지만, 야간과 휴일에 너무 의식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p> <p>시기와 횟수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이라도 장애인 주차장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p> <p>제 차량은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있는 아버님의 명의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없으면 장애인주차면에 세워서는 안 되지요.</p> <p>너무 부족하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p> <p>더군다나 첫 기자의 취재 시, 당황하여 최근의 기억만 가지고 변명한 것이 거짓말 논란이 되어 더욱 화근이 되었습니다.</p> <p>각설하고.. 이유 불문 저의 잘못입니다. 다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p> <p>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첨부하여 보도 자료도 보냈습니다.</p> <p>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여러분에 대한 죄송함이 더 큼니다.</p> <p>관장으로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전당과 직원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습니다.</p> <p>용서하지마시고 앞으로 하는 것을 봐서 부디 헤아려주십시오.</p> <p>앞으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전당과 우리 시의 예술발전을 위해 더욱 조심하며 잘 하겠습니다.</p> <p>지탄의 화살과 마음의 불편함은 모두 저에게 넘기시고, 조심스러워하지 말고 소신 있게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p> <p>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p>	
2020. 11.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시-자치구 도로시설물 관리 - 대전시와 각 자치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분담을 놓고 신경전 - 자치구에서 도로시설물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등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도의 개축, 수선 등 유지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을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하였 	교통건설국 공공교통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지관리에 대해 도로법 등 규정을 근거로 모든 업무는 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 설치하는 시가 사업 주체이므로 원인자로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자치구에서 주장 - 자치구는 시에서 신호기 설치 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차선을 설치하고 나서 가로수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하고 자치구에 업무를 맡겨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려 한다고 함 	<p>으므로 모든 업무는 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 설치하는 민원 등의 사유로 경찰청(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경찰청(서)이 시와 자치구에 설치와 수선을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 가로수 이식, 보도의 수선, 신호기 설치 등 가결된 심의 사항 추진은 시, 자치구 각각의 업무대로 분담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 시 자체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이른바 ‘원인자’로서의 사업이 아님 • 또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사항 추진에 대해 시를 원인자로 보기 어려우며,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가로수 이식, 도로의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처리할 업무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경찰청(서)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도 동시에 공문으로 보내 사업 시작 전 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자치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보도 턱 낮춤, 가로수 이식(제거), 중앙분리대 제거 등 자치구 사무의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를 맡겨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 • 앞으로,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추진 일정 공유 등 심의 결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음 	
2020. 11.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신임 예술감독 선정 뒷말 무성 • (충청투데이)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예술감독 부정 선발 의혹 - 최종 발표가 나기도 전에 2명의 2차 면접대상자와 심사위원 명단이 지역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성을 담보하여 합격자 발표시 심사위원 명단 공개 추세이나, 협소한 인력풀 관계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 명단이 지역 국악계에 오르내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1차 서류심사(11.9/월) 및 합격자 발표(11.13/금) * 11.9(월) 심사 이전에 심사위원 명 	대 전 시 립 연정국악원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악계에서 오르내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 공모 때부터 최종 합격자가 누가 될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 명단 노출된 심사위원장과 최종 선정된 예술감독은 특정학교 직계 선·후배 관계이며, 학연에 의해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예술감독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 선발된 예술감독은 지자체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2013년 8월 이후로 국악단체를 이끌거나 지휘자나 예술감독으로서 뚜렷한 경력이 없어 심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p>단이 노출되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11.13(금) 합격자 발표 이후 11.21(토) 응시자 A씨가 주장<심사위원 일부 (5명 중 1명) 노출>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11.18/수) 이후 확정(11.20/금)한 사항임 * 응시자 A씨는 1차 합격자 발표(11.13) 이후 본인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의가 없었음 • 예술감독 채용 시 특정 학연·지연은 전혀 연관성 없었음. 그동안 2015년부터 위촉된 상임 예술감독 겸 지휘자의 출신 학교는 다양함 -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평가 심사 내용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엄정하게 심사에 임함. • 악·가·무 종합 예술단체인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단원들과의 소통 등을 중시하여, 적격자로 판단하였음 - 노부영 신임 예술감독은 국립국악원 정악단, 창작악단에서 단원부터 지휘자까지 역임하고(24년),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임기만료(2년) 이후에는 국립강원대학교에서 후학 교육을 하며 객원 지휘자로 꾸준히 활동을 하였음. 	
2020. 1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시 대기오염 저감 바람길숲 조성 한창 - 때 아닌 나무심기 예산낭비·효과 의구심 - 이례적으로 겨울철에 나무 식재 공사가 진행되는지 의심의 눈초리 - 예산이 남아돌아 나무를 심는 게 아니냐는 등 갖은 억측과 의구심 - 공사에 대해 시민들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과연 공사 목적에 맞는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심 내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증가 추세에 도시기후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도시숲 확충을 통하여 도심 외곽의 청정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 도시숲 1ha는 168kg에 달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미세먼지는 도심과 도시숲을 비교시 도심대비 도시 숲의 농도가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는 평균 40.9%나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같은 게 아닌지 의문 - 작은 나무가 과연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 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 일부 구간은 기존에 있던 나무를 통째로 뽑아 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데 문제가 있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녹지대의 나무들은 흡착작용을 통해 분진의 확산을 막아주거나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공기 중의 먼지가 바람을 타고 나무를 통과할 때 상당량은 나무에 의해 걸러지는데, 풍속이 빠를수록 여과되는 횟수가 늘어나 도시 공기가 더욱 깨끗해짐 • 따라서, 도심 내 건설된 도로의 녹지를 이용해 바람길을 형성할 수 있으며, 도로의 우수한 통풍조건을 이용해 오염된 대기를 도시 밖으로 배출하여 도시의 대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지침에 수목의 생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제시된 미세먼지저감 수종을 식재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세먼지저감 효과가 우수하거나 양호한 수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음 • 나무심기는 산림청 고시 제2013-87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및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에 따라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대전시 원도심 및 신도심의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 및 시민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20. 1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성인지 교육? -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외 부강사에 의한 신종 코로나 19 확진자 15명 발생 - 여성가족부 집행예산의 상당부분은 성인지교육과 성평등정책 강화 예산으로,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림 - 정부와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효과 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성인지 관련 교육과 성평등 정책 예산’에 대하여 - 여성가족부 2020년 예산중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체 일반 예산 중 7.7% 정도임.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여성아동인권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53%를 차지함.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관련 예산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기획조정실 성인지정책 담당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대전시 한밭수목원 물놀이장 방문자 남녀 성별분리 통계와 대전시교육청의 영재학급 운영담당교사 비율문제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는 억지스러운 부분 많다' 는 것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한밭수목원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은 「2019년 성별영향평가 과제사업」으로 한밭수목원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자의 성별 분리통계를 도출하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를 제공하고 자 한 것임. 이는 남성과 여성이 처한 사회 환경차이로 성별에 따라 정책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제시하여 성별로 다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임 - 특히 한밭수목원 물놀이장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자주 찾는 곳으로 물놀이장 구성 시 수유실 설치, 샤워장 및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불법카메라 감시 장치 구비 및 수시 점검, 노약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안전지수를 높인 우수사례임 - 또한 대전시교육청 영재학급 운영사업에 대해 고등학교 남녀교원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나,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여성비율은 약 40%수준으로 나타남. 여성교사의 경우 일/가정 양립으로 인해 방과후·주말 운영되는 영재학급의 참여가 어려운 성별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운영 방식을 마련해보는 것으로 하였음. •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함 	
2020. 12.8	〃	• (중도일보) 시민 허덕이는데 공간 채우는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회 추경에 예비비 증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한 이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일보) 대전시의 이상한 재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회 추경안에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 대비, 147억원이 증액된 419억원을 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0억원을 적립하는 등 여유 있는 재정운영 -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올해에 비해 500억원 증액한 1,000억원으로 하는 등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 -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이자가 붙는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 기금적립을 잉여금으로 해야지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은 이해가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상 예산규모의 1% 이내로 제한 - ‘20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인 4조 4,182억원의 0.6%인 272억원을 편성하고, 5회 추경에 국비보조 변경 및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 사업 등 553억원을 감액하여, 감액재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70억원), 재정안정화기금(150억원) 등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사업 553억원 (국비변경 감액 303억원, 자체사업 감액 250억원) - 예비비 편성액 419억원 중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전출(200억원), 코로나 방역지원(10건 12.6억) 등 216억원을 기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3억원임 (예산액의 0.4%). -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신규사업 계상보다 기존 사업들의 조정기능이 커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감액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150억원)에 적립하여 내년도 추경 편성재원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피해서민지원, 경제회복 등)을 위해 4차례 추경을 통해 9,031억원 편성 •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대폭 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순세계잉여금 발생추이를 참고하여 본예산 편성시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편성 재원으로 활용되며, 내년 상반기 결산을 통해 확정 - 직전 3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평균액(1,100억원) 수준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세입세출결산 후 추경을 통해 감액 또는 증액 조정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유재원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채로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는 소폭 증가한 반면,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부족한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분 발생 시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 - 지방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자본적사업과 지방채 차환,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 가능하며, 지방채 차입 실행은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도 중 발행 시기 결정 ※ ' 21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3,294억원 중 2,674억원 발행계획임. ※ 타시도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20년) 대구 900억원, 광주 500억원 (21년) 인천 756억원, 울산 80억원, 강원 300억원, 경북 148억원 	
2020. 12.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서구,유성구에서 사용 많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통대전 연령별 가입 1위, 40대(10만여명) 전체 가입자의 25%, 1인 평균 사용량은 월평균 13회, 33만원 지출 - 전체 사용량 중 60% 이상 서구와 유성구에서 사용, 업종별 사용액(6~8월) 1위, 유통업(월평균 1,600만원)사용 1건당 결제금액 상위 업종 1위 가구업(1건당 3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보도자료는 대전세종연구원의 6~8월까지 온통대전 가맹점 및 사용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이나 발행 초기 데이터로 현재 사용 인원, 실적 등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추가 보완이 필요함. • 대전시는 출시이후부터 12월까지 온통대전 사용누적데이터를 바탕으로 온통대전의 정확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초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알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1.4.	해당기자 설명 및 시 홈페이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바이오협회 발표 2019년 기준 국내바이오산업 실태조사결과 대전의 바이오산업 규모가 전국 17개 시도중 TOP 3위 규모임에도 판매·수출실적은 부진. - 바이오기업 업체수 3위, 바이오인력 전국 6위, 바이오산업 투자규모 전국 5위 등 바이오산업 규모면에서는 우수. - 국내 판매액과 수출액은 1,600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11위에 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바이오협회 발표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방식의 한계 존재 -한국바이오협회의 전국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방식은 2018년도 조사 기업에 2019년도 신규기업을 추가한 후, 설문을 실시하여 조사. -즉, 기업의 설문에 기반한 통계자료이며 실제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자료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일례로 대전의 바이오기업은 83개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청 기준 대전의 바이오기업 수는 현재 600여개가 넘고 있는 상황임. • 대전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및 성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R&D 혁신거점으로서 40년 이상의 과학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원천기술,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다수의 연구기관 보유. -생명연, LG 연구소, KAIST 등 산학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딥테크 기반 바이오 스타트업 600여개 집적. -대기업 투자기반 대규모 생산시설이 몰려있는 경기, 인천(송도)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오송·대구와는 달리 출연연의 R&D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 벤처창업이 자생적으로 생성되는 연구개발형 클러스터임.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R&D 연구에서부터 사업화를 통한 매출,수출이 발생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오랜기간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단일의 기업이 모든 과정을 완수해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바이오기업은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모델(라이센싱 아웃 등)을 가지고 있음. -대전은 바이오산업 전주기중 초기단계인 R&D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는 클러스터로 수출과 매출·실 	과학산업국 미래산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적은 낮을 수 있으나 해외 기술수출 이전, IPO를 통한 기업성장, 전국 벤처캐피탈의 투자실적 기준으로는 전국 최상위 클래스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산업 글로벌 허브도약을 위해 대전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바이오 벤처기업의 성공요소 및 지역여건의 특징점을 고려해 바이오창업 허브도시로서의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 -이를 위해 한국형 바이오랩센트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확대운영 등 ‘2030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마스터플랜’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1.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교 승진 시 근무연수가 짧은 일부 직원이 승진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인 직원 3명이 승진했는데, 3명 모두 전·현직 소방간부 자녀로 확인되어 아빠 찬스 의혹 - 1명은 무단결근 이력이 있는데 징계 대신 승진함 • 현장인력보다 내근직의 승진 비중이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위 승진자 16명 중 15명이 내근직 이며, -센터장, 구조·구급대장 등 최일선 지휘관 36명 중 승진심사대상자에포함된 사람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교 승진 시 근무연수가 짧은 일부 직원이 승진했다.”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교 승진심사대상자 72명 중 선발된 24명은 근무경력 3년 이상 직원 12명, 2년 이상 직원 9명, 2년 미만 직원 3명임. -심사대상자 72명 중 3년 이상 15명, 2년 이상 45명, 1년 이상 12명 -승진심사대상 계급인 소방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년 -소방교 승진자 중 전직 소방간부 자녀 2명, 현직 소방간부 자녀 1명이 포함되어 있음. -승진심사위원회 운영 시 정실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구성 시 제외하였으며, - 승진심사는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등을 기준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음. - 무단결근 이력이 있는 직원은 2018년 6월 최초임용 후 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1년 7개월 근무 하던 중 2020년 1월 행정부서로 인사발령 되었으며, 발령 후 행정 업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무단결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 	대전소방본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며, 2020년 2월 안전센터로 근무부서 변경 인사발령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하여 소방청에 복무감사를 요청함 • “현장인력보다 내근직의 승진 비중이 높다.” 와 관련 <p>-소방위 승진자 16명 중 승진심사 당시 내근직은 9명, 외근직은 7명이 고, 내근직 9명 중 7명은 현 계급에서 내근직과 외근직을 모두 경험한 직원이며,</p> <p>-최일선 지휘관에 해당되는 소방경 계급은 소방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현장지휘경력과 행정업무경력 등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며, 보직을 순환하면서 근무경력과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승진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음.</p> <p>-소방청 복무감사 결과에 따라 미비점은 보완하고, 승진심사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등 불합리한 부분은 소방청과 협의하여 개선, 전 직원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음.</p>	
2021. 1.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지지부진 - 매봉공원 등 행정소송으로 차질, 올해 착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봉공원 등 행정소송으로 차질, 올해 착공 노력 <p>-매봉공원, 월평공원갈마지구는 제안 수용이 취소되어 市에서 재정매입 중 / 민간특례사업 시행 안함</p> <p>-금년까지 매입완료 후 생태환경보전 및 시민의 친환경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p> <p>-또한, 매봉·월평공원(갈마지구) 행정소송은 용전공원 등 3개 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p> <p>-현재 진행 중인 용전·월평정림지구·문화공원 특례사업은 2020. 5. 29.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문제없이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올 하반기 착공 계획임.</p>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1.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지하차도 개선 혈세 낭비 우려 - 대전시 20억여원 투입 공사, - 시민들 멀쩡한 타일 제거 지적, 1개 차로 점령 안전사고 위험 - 멀쩡한 지하차도 타일을 뜯어내는 등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시민 비난 - 기존 벽에 부착된 타일을 철거해 페인트 등을 칠하는 사업 - 출·퇴근 시 한 차로를 이용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 빈번 -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차도를 두고 도시미관 공사가 이해가 안 됨 - 차량 통행이 없는 새벽공사는 예산이 초과해 어쩔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차도 시설개선사업은 지하차도 노후(준공 20년 이상)에 따른 벽면 타일 탈락,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 등 파손 증가로 시설물 보수시기가 도래하였고, 차량통행 안전위험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삼천지하차도 등 15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갈마·탄방지하차도는 건설 당시 설치된 벽면 타일 탈락과 콘크리트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급회 공사 시 기존 타일 제거 및 콘크리트 균열부 보수를 완료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오염도장을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2019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결과, U-type 및 BOX 벽체부에 발생된 타일균열, 타일탈락, 파손 등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으로 전단면 타일제거 후 표면보수토록 보고되었으며, 벽면 타일이 떨어져 승용차와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민원이 있어 왔음. • 지하차도 시설개선사업은 단지 도시미관 개선 목적이 아닌 적절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통행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기에 보수공사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함에 목적이 있음. •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차량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오전 9시 이후 공사 착수하여 오후 5시 이전에 현장 정리 및 전면 개통하는 등 공사시간을 준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공사기간 내 시민 불편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임. • 현재 동절기(1~2월) 품질저하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 일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정지 중에 있으며, 3월초 공사 재착수하여 조속한 사업추진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2021. 2.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제 기능 잃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망「해바라기센터」 - 센터 설치된 대전 충남대·단국대병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학대로 인한 발열로 코로나 검사 의무화 등 문제 ⇒ 전문병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머리글「제 기능 잃은 학대피해아동 보호망 ‘해바라기센터」」과 기사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해바라기센터’가 학대피해아동 보호망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해 지원하는 긴급이용 시설이므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업무를 주관 업무로 하고 있지 않음. • 해바라기센터의 주요기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 개입이 필요한 성인 등에 대하여 의학·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도 대전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기획조정실 성인지정책 담당관
2021. 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대전시 언택트 토토즐 페스티벌 / 시민 무관심속 혈세낭비 논란 - 대전시가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언택트 토토즐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 반응이 없다 시피 한 데다가 오프라인 행사와 예산규모가 큰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19년에 추진한 밀집형(EDM 등) 묶임 행사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과 비대면을 병행한 온택트 행사로 진행되었음 (*행사기간 : ‘20. 10. 31. ~ ’21. 2. 14.) •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투입 예산 외에도 경관 조명 · 퍼포먼스 행사 추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이를 보이지 않아 시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음	<p>을 위한 예산도 투입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약 20여만 명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9년 보다 업그레이드 된 경관 조명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가족단위 방문객의 포토존에 대한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1.7 ~ ' 21.1.30. 동안 18시 이후 203,032명 참여(1일 스카이라드 거리이용수) • 또한, 원도심 홍보영상 등의 효과로 행사 기간 동안 중앙시장 등매출이 15%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축제 개최 홍보를 위해 tjb 방송(라디오·TV 자막, 1일 3회 이상) 등 활용 하였으나, 오프라인 행사 집객 현상을 막기 위해 바이럴 홍보 등에서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짧은 홍보 기간 및 프로그램의 단순성 등으로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당 조회수는 저조함 • '21년 행사는 다양한 홍보 방안 · 프로그램 마련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과 여행객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축제를 선보여 '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이어가도록 할 예정임 	
2021. 2.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KBS) '친환경 급식 한 다더니... 밥상엔 로컬푸드 만' - 친환경 급식비를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잔류농약 기준치만 통과한 일반농산물인 '로컬푸드'로 공급 - 대전에서 생산된 쌀과 호박, 버섯 등 일반농산물인 로컬푸드 일색 - 친환경농산물도 아니고 식단에 맞춘것도 아니어서 처치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3년 전(2018.11월) '대전시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고교까지 확대' 라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를 제공한바 있음. -방송 내용 중 친환경 급식비를 친환경 인증농산물로 공급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친환경 급식비라고 규정함. -그러나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우수 식재료를 공급한다. 라는 의미임. -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시민공동체국 사회적경제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 사업임.</p> <p>-우수 식재료 범위로는 국가(농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와 지자체가 인증하는 로컬푸드가 있음.</p> <p>-따라서 친환경 인증농산물로만 공급해야 한다. 라는 방송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를 잔류농약 기준치만 통과한 일반농산물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320성분 잔류농약 검사를 거친 지역 친환경 농산물과 잔류농약 1/2 이하인 지역 농산물에 한 발가득이라는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부여하므로 우수한 지역 식재료임. • 특히,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지역 식재료 공급의 경우, 국제공인 분석능력을 보유한 대전농업기술센터에서 매월 공급 전 320성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불검출로 인정된 지역 농산물로만 공급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농식품부 농산물 국가 인증제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전통식품, 농산물 우수관리, 지리적 표시, 동물복지, 저탄소 등이 있음. • 또한 방송 내용 중 일반농산물로 오보된 느타리버섯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며 매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재검증하여 납품하고 있음. 	
2021. 2.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KBS) ‘대형 조합, 법인 매출 싹쓸이’ 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 일부업체 특혜 - 대형 조합, 법인 공급률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조합, 법인 싹쓸이라면서 제공한 자료와 다릅니다. -공급 참여농가 106농가 아닌 163농가 -방송보도 자료제공에 대한 사실 확 	시민공동체국 사회적경제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자체 수수료 15%내외 대전시 25% 지나치게 높아 업체 특혜 	<p>인</p> <p>⇒ (보도내용) 매출액이 지역농가에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개별농가 163농가 평균 연 1,500만원 이상 소득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내용) 대형조합, 업체 53% <p>(사실내용) 매출규모가 큰 대형조합은 없고 업체 공급액 7.1억 (25.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밭가득가공업체(4곳), 한밭가득 콩나물 법인(1곳), 대체 친환경(8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자체 수수료는 15% 대전시 25% 업체 특혜 <p>⇒ 공급 유통업체 선정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 유통비용은 25%로 집품 · 검수 · 검품 · 보관 · 배송 · 반품을 포함한 가격으로 소매 유통비용의 평균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p> <p>타지자체의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운영을 위한 비용(운영비+수수료)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p>	
2021. 2.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예당, 공연 쏠림현상 뚜렷 - 클래식 공연 위주의 공연에 편중돼 있어 시민 문화욕구 충족 부족 -대전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중 클래식 공연이 전체 비율에 약 80% 차지하는 등 특정분야 쏠림현상이 두드러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클래식 분야 공연 횟수가 40회 정도로 집계, 같은 기간 연극과 무용 등 타 공연 횟수가 평균 1-2회에 그침 -일부 협회에서는 예당 대관료가 높은 가격에 책정되는 등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어려움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중 클래식 공연이 전체 비율에 약 80% 차지하는 등 특정분야 쏠림현상이 두드러짐 -대전예술의전당의 경우 2018 ~ 2019년 최근 2년간 클래식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연의 34 ~ 38% 정도 수준임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소된 많은 공연의 대안공연으로 마련한 온라인 공연은 비교적 준비일이 짧고 소규모 편성의 클래식 공연으로 진행 • 높은 대관료로 공연진행의 어려움을 호소 -현재 대전예술의전당 대관료는 2003년 개관 이후 인상되지 않음 	대전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비슷한 규모의 타 공연장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대관료임</p> <p>•부서조치</p> <p>-다양한 장르의 관객개발과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연극과 무용 등의 제작과 유치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p> <p>-향후 공연의 장르별 균형을 지향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 선호도 조사 등으로 지속적 보완</p>	
2021. 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나이트 대전시립예술단 어찌나, 해결책 명예퇴직 3년간 3명 뿐 지역사회 활동체계 구축 목소리 - 대전시립예술단원 고령자들로 젊은 예술인들 입성문이 비좁다는 의견 - 대전시가 시립예술단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명예퇴직제도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 - 예술장르에 따라 정년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조치계획 마련 - 예술단 모집, 복무규정을 장르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퇴직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원 정년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상위법(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의적으로 조정 어려움 - 그러나 대전시립예술단은 단원 고령화에 대비하여 평정제도를 개선해 예능기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평정 주기 2년→1년) 또한 공석이 발생 할 경우 채용시기를 검토하여 신규 단원을 채용하고 있음 - 단원 모집, 복무규정을 예술단 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일부 공감하며 모집방안이나 평정 등 예술단별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다만 복무규정은 단체별로 임의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고려가 필요하고 예술단별 운영은 오히려 단별 위화감이 조성 될 수 있어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에 단원 불만 고조 예상됨 -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문화재단이나 문예회관을 통해 운영 중이나 명예 퇴직한 단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등 활동지원을 한다면 젊은 예술가 및 예술단 출신 아닌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며 퇴직단원들을 활용한 공연 참여 등 찾아가는 공연에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각 단 예술감독들과 검토하여 방안 모색 • 예술단원의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법에 의거 정년 보장</p> <p>-시립예술단원의 정년은 법에 의하여 60세로 정해져있는바 단원들의 근무기간은 보장되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명예퇴직 제도 <p>-단원 고령화에 대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2018년에 1명(무용단 1명), 2020년도에 3명(무용단 1명, 교향악단 1명, 사무단원 1명) 등 명예퇴직 하였고 제도 운영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임</p>	
2021. 2.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일보) ‘대전 농업인 단체, 정기현 때리기’ <p>-로컬푸드 꾸러미 사업 전체 예산의 25%가 대행수수료이고 농업인 수취가에 28%의 수수료가 붙어 공급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은 공급대행비용 25%, 농업인 수취가는 75% <p>총급식비 = 농업인 수취가 + 공급마진28% + 수수료 25% → 사실아님</p> <p>⇒ 공급마진 28%는 없는 비용이며 농업인 수취가는 지자체(시·구)에 생산자 직접 청구 지급</p>	시민공동체국 사회적경제과
2021. 3.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예술은 여전히 배고프다...무대 설치 꿈 어디서 이루나요 <p>- 시립예술단체 단기 무대인력 공개채용 전무</p> <p>- 국악원 개관이후 무대 전문인력 공고를 단 한 차례도 올린 적 없음</p> <p>- 예술전공학생, 직원 가족, 지인들로 인력풀 꾸려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공연 시 사역하는 무대 보조인력은 일용직 근무자로서 의무적인 공개채용 대상은 아님 <p>* 공무원 및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및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13조에 의거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무대 보조인력의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공개 채용 대상은 아님</p> <p>*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p> <p>예)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며 10일간 주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은 예술성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특수성이 있는 공간으로 불특정 누구나 무대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대전시립연정 국 악 원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원에서는 그런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동안 공개 모집은 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음악과 예술을 이해하는 한국음악과 및 기타 예술 전공 재학 및 졸업자 위주로 학교 추천 및 주변의 소개를 받아 공연 시에 임시 고용 운영해 왔음 • 앞으로 무대보조 인력의 고용에 있어 무대 일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 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중 상시 모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으며, 현재 국악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하였음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무대보조인력 모집 공고(제2021-5호 /2021.03.15.) 	
2021. 3.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 지하철도 공사 장기화 불편 가중 - 대전 갈마탄방 2곳 지연, 교통정체 심화, 지진예방 이유 내부타일 교체 시민 의구심 - 지진발생 시 벽면 타일 탈락 우려해 착공하였다는 공사추진 배경 의아 - 더 노후화된 곳이 많은데 해당 지하철도만 공사 하는 이유 지적 - 당초 1월 28일 공사 준공 계획이었으나, 70여일 가량 미뤄짐 - 출·퇴근 시 차선 통제로 정체 현상 심화 및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아 소음 문제로 주간 공사 고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도 시설개선사업은 지하철도 노후(준공 20년 이상)에 따른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 벽면 타일 탈락 등으로 보수시기가 도래되었고, 구조물 유지관리와 차량안전운행 및 도시미관 저해해소를 하고자 2018년부터 삼천지하차도 등 15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갈마·탄방지하차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2019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불임 1,2), U-type 및 BOX 벽체 부에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 및 백태, 타일 균열·탈락 등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으로 전단면 타일제거 후 표면보수토록 보고되었고, 벽면 타일이 떨어져 운전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음. • 이에 우리 시는 갈마·탄방지하차도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콘크리트 균열부 보수와 타일 제거 완료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 이후 공사 착수하여 오후 5시 이전에 현장 정리 및 차로 전면 개통으로 시민들의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였음.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편도 3차선 중 1곳을 통제하면서 겨울철 공사 일정이 멈췄고 70여 일간 공사가 미뤄지면서 차선 통제까지 더해져 시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동절기 품질저하에 따른 부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 일시 정지기간('20.12.29.~ '21.03.07 / 69일간) 동안 차선 통제를 실시한 바 없음. • 또한, 야간작업 시 기온 저하(5° 이하)· 높은 습도 등 현장여건이 공사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콘크리트 표면 보수에 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기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주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제설재 등으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오염도장 등을 실시하여 4월 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나,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2021. 3.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시 국제회의복합지구 관심 없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산업 핵심 사업 불구 공모 지원 안해, “타지자체 적극행정과 대조적” 비난 목소리 - 대전시, 2018년부터 문체부에서 시행 중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승인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는 등 MICE산업 육성에 소극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신설된 제도로써, 문체부 장관이 2018년부터 격년제(짝수년도)로 지자체가 제출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하여 공모가 가능한 사업임. • 우리 시는 2022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목표로 대전컨벤션센터 일대 약 200만㎡(60만평)를 국제회의복합지구 범위로 설정, 2020년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3월에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음. • 올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과학 특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과제를 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 담당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은 「2021년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언론에 다수 보도(2021. 3. 18.)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대전 컨벤션센터 일대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하기 위하여 ‘집적시설 협의회’를 구성, 관련 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음. •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21. 3.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무인주차관리시스템 ‘기대 반 우려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2023년 까지 관내 노외 유료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예정으로 시민 편리성 증대나 운영비 절감 기대 - 그러나, 관련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주차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관리인 등 1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개선계획(20.2.)』에 따라 관내 노외노상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주차장을 구축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주차장 : 민원차량이 주차장 이용 시 사람 수기방식이 아닌 전산처리로 정확한 요금(입출차 시간 확인), 카드 사용 등 그동안 줄곧 제기된 불친절 민원 사전 예방(요금 규정 미이행 및 현금 요구 등) • 최초 구축 개선계획부터 노외주차장은 구청과의 협의에 따라 유인 또는 무인 스마트 주차장으로 구축, 노상 주차장은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유인 운영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 • 금번 보도된 “노외 공영주차장 68 곳에는 노외 주차장 한곳 당 2 ~ 3명의 관리인들이 고용되었으며, 100여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거 같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외 주차장은 관리실이 1인 주차 박스형태로 설치되어 2 ~ 3명의 관리인들이 고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실제 2 ~ 3명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의 관리인들이 고용되어 운영되는 곳은 노상 주차장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개선계획에 따라 노상 주차장은 통합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유인시스템 운영예정으로 해당 부분은 맞지 않는 기사내용 - 다만, 노외 주차장을 무인으로 운영할 시 개소당 1인에 한해서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나, 노상 주차장 운영인력 채용 시 노외 인력 활용 및 노상 확대 채용을 자치구에 독려할 예정 • 대전시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스마트 주차장과는 다르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경차, 장애인 등) 및 산재해 있는 주차장 데이터 통합 활용으로 향후 주차장 구축 등 정책지원 이용 가능 •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주차장환경을 통한 주차 공유도시 대전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021. 4.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S 1) 대전시, 코로나 확산세에도 1500명 참여 행사 개최 ‘논란’ - 식목일 맞이 나무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선착순 1500명에게 나무 2주씩 지급, 시민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준수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로부터 불만 - 손 소독제 사용하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시민은 물론 이를 안내하는 직원조차 없어 불안감을 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2021. 4. 2. 10:00~ 한밭수목원 주차장에서 제76회 식목일 행사를 비대면 방식(Drive-thru, Walking-thru)으로 진행함 ※ 1인 2주의 나무(영산홍, 꽃자나무) 1,500명 대상 3,000본 지급 • 행사 개최 홍보 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 내 방역수칙 안내판 설치, 60명의 행사요원을 배치하여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준수, 손 소독제 사용 등)을 안내하였음 • 올해 식목일 맞이 기념행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농가 지원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나무를 나누어 주고 나무 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한 행사임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사라져가는 은행 점포...금융사각지대 놓인 고령층 -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 늘며 충청권 금융점포 축소 - 시 금고 선정 등의 사업에서 점포 수 관련한 항목과 배점을 확대해야 함 - 그러나 금고 선정시 점포 수와 관내지점 등의 항목과 배점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야 해 지자체 차원에서 변경은 불가능 - 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 • 시민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라 관내 지점의 수 등 항목에 배점을 기존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 6월 중 대전광역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임 	자치분권국 세 정 과
2021. 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UCLG 대전총회 차질 우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방문객이 5,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5성급 신세계호텔을 추가하더라도 숙박시설이 20개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국제행사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문제제기 - 숙박시설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칫 방문객들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모텔 등의 시설에서 숙박해야 한다고 우려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3월 중 숙박업 리스트를 가지고 행사장(대전컨벤션센터) 주변의 호텔을 중심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호텔을 현지 조사하여 2개의 메인 호텔과 19개의 호텔로 정하고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숙박계획21.4.5』 수립하였음 • 금번 보도된 숙박시설이 20개 밖에 안된다는 것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숙박계획21.4.5』에서 행사장에 인접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외국인 숙박시설로 조사된 숫자임 • 하지만, 현재 대전에는 관광 및 일반호텔급으로 32개소 2,473실이 있으며 레지던스 호텔급으로 41개소 1,932실이 있어서 합계가 73개소 4,405실인데 2인실이 다수임을 감안하고 5,000명의 예상 방문객 중 내국인이 3,000명인데 내국인은 일부만 체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수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 앞으로 대전시는 내국인과 저개발 국가 참가자 등 다양한 숙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렴하고 우수한 숙박시설도 추가로 안내할 계획임 	기획조정실 세계지방정부 연합(UCLG) 추진기획단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4.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대전시 기업 이탈 방지책 실효성 논란 -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구축이 단순 통계를 마련하는데 그치고 협력관 제도도 시정 홍보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전망 - 2018년 기준 지역별 기업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최신 수치를 입력해 대전지역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단순 통계 수준 - 기업협력관은 애로사항에 도움이 될 시책 정보 제공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 수집·해결을 위해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정착 및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 •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은 한국기업데이터를 매월 수집·분석하여 우리 지역의 기업현황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근로자수 등을 비교·분석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선제적으로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 주 기능임 - 시스템은 지역 내 5인 이상 기업 및 유출입 현황조회 기능, 지원이 필요한 기업 선별 기능, 기업협력관 매칭 기능을 갖추게 됨 * 경영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종합 신용등급, 국민연금가입자수 등 •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여 현장 중심의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 대전시 7급 이상 공무원 100명으로 선발된 기업협력관이 시스템에서 선별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 자금, 기술, 판로, 구인, 산업용지 등 전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부서에 이를 전달하여 해소될 수 있게 돕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대전지회에서도 회원 40여 명의 재능기부를 통해 매주 1회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전문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함 • 끝으로,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와 기업 애로사항의 신속 수집·처리를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오는 5월 3일에 체결하여 기업 유출입 관리시스템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일자리경제국 기업창업 지원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4.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NEWS) 도심 하천 산책로에 화장실 ‘오물’ 넘쳐 ... ‘관할 타령만’ - 하천내 오물이 넘쳐 흐르는 화장실 오수 맨홀 한 달 가까이 방치 - 천변 공중화장실에서 오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데 화장실 사용금지 조치조차 하지 않음 -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와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접수 후 시설관리공단과 현장 확인 후 정화조 처리 업체 및 관탐사 업체에 예약을 하였음 • 정화조 처리 업체에서 오물 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늦어진 상황임. •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하 천 관 리 사 업 소
2021. 4.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대전시 약속사업 드림타운 민간기업 참여 이끌어 낼까 - 기부채납 비율증가...업계참여의지 상실 - 기부채납 비율이 상향으로 지역건설업계 참여의지 저하 - 기부채납 비율을 축소 및 구역확대 등을 요구하던 지역건설업계 요구사항 미반영 의사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채납 비율이 상향되는 것에 대한 사항 ⇒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드림타운 기부채납 비율은 25%로서 변동이 없으며 기부채납 기준이 증가한 것은 아님 금회, 드림타운 기부채납비율이 높아진 사유는 사업시행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임 • 지역건설업계 요구사항 미반영 / 구역확대 등 ⇒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구역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건설업계 등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운영 할 계획임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2021. 4.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대전 일부 비영리단체 보조금 받고 활동 안해 - 최근 보조금 지원 단체 중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고, 일부 단체가 보조금 등 혜택을 받고 제대로 된 활동이 없고, - 단체 설립시 일정 기준만 충족시 가능,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강제해산은 어려워 유명무실한 민간단체 난립의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시 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제255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연속적 선정 및 유사 중복 지원 등의 지적에 따라, 2021년 공익사업 평가 시 역량있는 신규단체 참여 확대와 타 부서 이중 지원받는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 가감점을 적용하였음. - 2021년도 66개 단체에 270백만원 보조금을 4월초 교부하였고,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중으로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컨설팅 및 지도점검으로 사업성과를 도모할 계획임.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등록 당시 요건만 갖추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 관리를 위해 2021년 1~3월중 604개 단체 전수조사(현지방문, 유선조사 등)를 실시, 미비단체 계도 등 정정신고토록 요청하였으나 150여개 단체 미이행 - 따라서 5~8월중 NGO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현황조사 및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행정절차를 거쳐 미이행 단체 등록말소 계획으로 향후 부실단체 난립 방지 위해 지속적 정기점검 등 관리 계획임. 	
2021. 5.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위험천만 ‘민간화장실’... 비용탓 안전사각지대 - 대전 변화가에 위치한 민간 건물 내 개방형 화장실이 비상벨은 물론 도어락과 폐쇄회로(CCTV)등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함 -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50%)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참여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에서는 ‘2017년도 안심벨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공공 개방 화장실 128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비상벨 작동시 경고음 발생과 동시에 경찰서 상황실에 자동 접수되어 인근 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 아울러, 자치구에서는 민간 개방 화장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촬영 점검 활동’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금번 보도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민간 영역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가 이같은 안전개선사업이 사실상 공중화장실에 한정되면서 비교적 성범죄 등에 노출되기 쉬운 민간 개방형 화장실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의 내용에 대해서는 ⇒ 2019년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은 기존 민간 개방화장실 뿐만 아니라 민간 화장실을 1년 이상 개방·운영하는 조건으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 유도하였으나 10개소 신청으로 저조한 사업 참여율을 보이며, 2020년 사업을 마무리하였음 ※ 안전개선사업은 조명 조도시설 개선, 출입문 개선, CCTV·안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심벨 · 안심거울 설치 등이며, 설치비용의 지원 비율(50%)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원 비율 확대는 불가능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안전을 위하여 자치구·건물주와 협의하여 안심벨 설치 등을 강구 하겠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2021. 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업무 평풍에 지역명 담긴 군함 진수식 놓친 대전시 - 대전시 지명을 딴 대한민국 해군 호위함 진수식이 열렸지만 대전시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 부서간 업무 협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역 이름을 딴 호위함 진수식에 참석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2월경 해군 본부로부터 ‘대전함’ 진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해군 본부와 관련 내용을 수차례 공유하였음 - 세부 일정이 결정되는 즉시 진수식 행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해군 본부, 소관부서(비상대비과) 등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 4월 중순 해군으로부터 당초 시장님이 참석하는 ‘대전함’ 진수식(거제도)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부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군 내부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 - 이에 대전시에서는 ‘대전함’ 진수식이 매우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할 의사를 해군 쪽에 전달하였으나, 해군에서는 함정 내 집단 감염 발생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부득이 행사규모를 축소 개최하는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했음 • 대전일보 보도내용과 같이 대전시가 ‘대전함’ 진수식 개최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거나, 업무 평풍 등에 따라 진수식을 놓쳤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앞으로 대전시는 ‘대전함’의 해군 인수 시점(2022년말)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함’이 실제로 2함대에 배치되는 2023년 6월경에는 해군본부와 함께 배치식 등 관련 행사를 추진할 계획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대전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자치구의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누적 미납액 동구가 8억3천만원, 중구 5억8천만원, 서구 5억5천만원, 유성구 3억4천만원, 대덕구 1억원이다. -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제도적 한계에 따른 납부지연도 한 요인으로 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자치구에서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산정방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평균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상황 중에서도 징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만큼 높은 징수율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고, 지방세는 재산이나 수익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p>※ 자료출처: 대전시 2020 지방세 통계연감</p>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세에 비해 강제성이 없어 납부저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 96%는 사실상 징수 가능한 부담금 최대치를 징수한 것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체납 시 1회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 자치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년 2차례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2021.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차도 건는 학생들...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 ‘보도’가 없다. - 대전지역 초등학교 148개교를 조사한 결과 41개교에서 보도 부재 등 문제점이 확인됨. - 일부 학교 통학로는 보도가 있을 자리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는 민선7기 약속사업인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조성 가능구간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결과 전체 초등학교(151개교) 보행로 120.3km 중 기 설치구간은 116개교(115.1km, 보도설치 어려운 구간 포함), 추가 보도설치 가능구간은 35개교(5.2km)로 소요사업비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지자체가 무인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설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통행을 억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행자의 권리는 배제된 것임. 	<p>는 6,97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통학로 보도설치 사업은 2018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도설치가 가능한 35개교는 올해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 한편 통학로 보도설치는 일반적으로 도로부지를 활용해 조성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한 구간인 도마초등학교 등 6곳은 교육청과 협업으로 학교부지를 이용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조성한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일부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의 경우 통학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조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통안전시설인 과속 방지턱,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판, 보도 노면도색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로를 보다 세심하게 진단·개선하고 통학로 보도,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2021. 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알뜰폰 결제도 안되고 휴대폰 연동도 안됨 - 알뜰폰 이용자인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이용 불가 - 휴대폰 어플로는 회원가입이 안돼 PC버전 웹사이트에서 가입 - 대전시와 대전시설관리공단이 개선사항 관리에 손 놓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슈 이용 요금 결제 수단 중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결제 대행사와 협약 체결된 알뜰폰 3사(헬로모바일, 티플러스, SK텔링크)는 가능하나 미협약 알뜰폰 체결사는 소액결제가 안되므로 타슈와 무관하게 대여 불가한 상황이나 • 소액결제 대행사와 알뜰폰 회사간 협약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21. 6. 13. 준공 예정)인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21. 6월 이후 신용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 현재 사용중인 어플은 2012년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당시 개발된 어플로 현재 추진중(‘21. 6. 13. 준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공 예정)인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이 가능한 어플을 개발하고 테스트 중으로 '21. 6월 이후 플레이스토어 등에 어플 배포 준비중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9월 무인대여시스템 개선방침 결정 이후 '19. 9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용역을 착수하고 '20. 6월 대중교통 환승체계 추진 방안(타슈이용시간 1시간 이내 무료/'22. 1월 시행) 마련 및 '20. 6월 공유자전거 병행 도입 등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1.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갈 곳 없는 청소년들… 우리 누가 보호하나요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청소년쉼터의 입소정원이 한계에 이르렀음 - 청소년쉼터가 없는 자치구도 있는 만큼 수용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자치구 동단위로 청소년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청소년쉼터의 입소정원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보도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청소년쉼터는 3개구*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원은 55명임 • 현재 청소년쉼터 입소 인원은 26명으로 정원 대비 47%임 * 청소년쉼터 설치 자치구 : 동구(1), 중구(3), 서구(2) 2. 청소년쉼터가 없는 자치구도 있는 만큼 수용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자치구 동 단위로 청소년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쉼터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47%로 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쉼터가 미설치된 자치구(유성·대덕)에 1개소씩 설치할 필요는 있음 • 아울러,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1388 상담원 배치, 아웃리치*와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 아웃리치 거점 지역 : 동구(우송대거리), 중구(대흥공원), 서구(느리울공원), 유성구(솔마루어린이공원), 대덕구(동춘당공원) 	청년가족국 교육청소년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학교·가정 밖 청소년 소통과 활동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꿈 키움 수당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연계 및 협력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021. 5.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대전시 올해 노후 간판 전수조사 ‘패스’ 안전 우려 - 올해 노후 간판 전수점검을 건너뛰면서 시민안전 우려 - 모든 지역 노후간판 전수점검을 일부 지역 집중점검으로 축소 -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점검대상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옥외광고물법」을 바탕으로 매년 불법 또는 노후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노후간판 등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2021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난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주요 점검대상으로 노후·무연고 등의 고정광고물과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이 많은 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 • 특히, 대전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 노후나 위험간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태풍발생기간 Safety-Sign 주간을 설정하여 민관합동방재단을 운영으로 순찰, 응급조치, 재난발생 원인조사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2021. 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단체)보문산 목조전망대 조성계획 즉시 철회하라 - (경관 및 환경훼손) ① 산림훼손과 보문산 자체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약속 	<p>① 고층형 타워를 반대’ 한다는 민관 공동위원회의 합의 내용*은, 고층형 타워가 조성될 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산림환경 훼손을 우려한 합의내용이라고 이해함.</p> <p>새로 지어지는 전망대는 목조 구</p>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한 정반대의 개발계획이며, 민관 공동위원회 협의를 무시한 행정</p> <p>② 11회의 민관 공동위원회 회의와 숙의를 거쳐 ‘고층형 타워설치 반대’,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 및 보운대를 개보수하는 수준의 저층 전망대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시민들의 이용과 필요에 주안점이 아닌 오직 건축물을 높고 번듯하게 세울 것에만 혈안</p> <p>- (탄소중립 의문)</p> <p>③ 목재를 쌓아 타워를 만들면 탄소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산림을 파괴하는 모노레일 운운하는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p> <p>④ TF 구성 및 관련계획을 진행하면서 민관 공동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고, 관련자료 공개요구에도 미공개로 협치의 가치 무시 및 불공정 진행</p> <p>- (요구사항)</p> <p>① 고층 목조전망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라.</p> <p>② 민관 공동위원회 의결사항 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p> <p>③ 관광활성화 명분으로 보문산 고유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철회하라</p>	<p>조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 특성(목재의 색감·질감, 통풍을 고려한 외형 구조)상 원거리에서 바라 볼 시에도 주변 산림 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p> <p>現 보운대 철거 후 기존 부지에 지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산림 훼손은 없으므로 민관 공동위원회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임.</p> <p>* (민관 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새로 전망대를 조성함에 합의하나, 고층형의 타워 반대</p> <p>※ 서울 남산타워(237m), 부산 용두산타워(120m), 대구 83타워(202m)</p> <p>② 전망대의 주요용도는 전망대, 전망카페 및 스카이워크이며, 그 외 시민 편의성과 디자인 등을 감안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건축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임.</p> <p>③ 보문산 목조전망대가 조성된다면 현대 목조건축의 선진 사례지로서 그 자체로 탄소중립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상징물이 될 것임.</p> <p>또 목조건축은 건축 시 일반 건축물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적음* 만큼, 선진 목조 건축인 보문산 전망대를 모델로 삼아 이러한 목조건축이 활성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산림을 젊게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p> <p>* 목조 주택은 건축 시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철근콘크리트 주택에 비해 1/4 수준/ 산림청</p> <p>※ 고령 숲(수령 30년 이상 등)은 탄소흡수량이 저하됨을 고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forest management) 필요, “조림 → 가지치기 → 솎아베기 → 수확(harvest) → 조림” / 산림청</p>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전망대~오월드 간 연결수단은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연결수단의 경제성 및 환경훼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전망대 건립과 오월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임.</p> <p>④ 보문산 활성화 민관 공동위원회는 '20.5.월 시민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한 위원회이며, 전망대 TF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행정절차 조율, 전망대의 주요용도나 규모 결정 등 기본구상을 위해 운영('20.12.~ '21.3.)된 TF임.</p> <p>용역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향후 건축현상설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서, 현재 관련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공개가 어려우나,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임.</p> <p>앞으로 대전시는 보문산 전망대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가치는 물론 조형미적 예술성도 구현할 수 있도록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이후 다양한 방안(시민 명칭공모, 행정절차 상 열람 공고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음.</p>	
2021. 6.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 BRT 공사에 갈 곳 잃은 가로수 106그루 - 북유성대로 중앙분리대 낙우송 이전 계획 세워 놓고 사업비·후보지 등 후속대책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현재 반석역까지 설치되어 운영중인 BRT 도로를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임. • 사업구간 중 외삼네거리에서 장대삼거리 구간(개량구간)은 기존 도로의 중앙에 버스전용차로와 BRT 정류장을 설치하고, 장대삼거리에서 유성생명과학고삼거리 구간은 BRT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임. 	트램도시광역 본 도시 광역 교통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6. 현재 신설하는 구간은 유성천 교량 등을 시공 중(공정율 34%)에 있으며,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개량구간은 신설구간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구간 내 BRT 정류장 설치를 위하여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 있는 낙우송 186그루 중 106그루의 이식이 필요한 실정임. 해당 수목의 이전 식재를 위한 사업비는 기 확보(74백만원)되어 있으며, 개량구간 착공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이전 식재지를 결정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p>※ 방동저수지 일원 낙우송 이전에 대해 유성구와 협의한 사실 없음</p>	
2021. 6.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TJB 8뉴스) (리포트) 대전 유성 ‘명품 도시숲 가로수길’ BRT 건설로 사라지나 - 대전시는 BRT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중앙화단의 가로수를 베어내거나 이식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 횡단보도와 유턴 구간을 활용하면 중앙화단(낙우송) 제거 없이 BRT 정류장 설치 및 이용 등 가능하며, - 유성구(녹지산림과) 및 환경단체(대전충남생명의숲)는 중앙화단 수목존치 및 이식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유성대로~월드컵대로의 녹지형 분리대는 중앙분리대의 한가지 형식으로, 금회 중앙 화단 가로수(낙우송)를 베어낼 계획은 없으며, BRT 차로 및 정류장 확보를 위해 녹지형 분리대를 활용하되 저축되는 가로수는 이식할 계획임 중앙 화단(낙우송) 존치 방안에 대하여 재검토 할 예정이나,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횡단보도와 유턴 구간을 활용하면 중앙화단의 존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BRT 도로 설치를 위한 시설기준 및 목적 등 기술적인 사항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됨. 인터뷰 내용중 이식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중앙 화단(낙우송) 존치 시 BRT 차로 및 정류장 확보를 위해 보도축소(공사비) 및 추가 용지확보(보상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중앙 화단(가로수) 철거(이식) 계획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됨. 	건설관리본부 건설부 건설 1과
2021. 7.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투데이)물폭탄 재현될까 무섭다~ “침수예측시스템 도입 해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역 호우피해 경향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지역은 3대 하천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발생 3시간 전 알림 주는 출연연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 2015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대전시가 침수예측솔루션 실증 사업 검토한 바, 인천시와 사업을 추진 	<p>면 하천범람, 토사유출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저지대 및 지하시설물 침수가 종종 발생함.</p> <p>2. 2015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검토한 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자료를 토대로 하천중심의 수문, 관로, 지형, 맨홀 등 침수예측하는 시스템(보편적 기술)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많은 기관에서 이미 연구한 자료가 다수 있음. •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요구한 바, 예산대비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전액 시비 부담) <p>3. 호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2020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20억원, 3년)에 선정되어 도심지 침수예측 및 영상기반 분석을 통한 ‘도심지 침수대응 시민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검토 사항을 기반으로 저지대, 지하시설물 등 도심지 침수 중점 분석 • 또한 하천범람 및 호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정비, 경사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IoT, 빅데이터 분석 등 뉴딜산업(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측 및 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2021. 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대전 창업기업 수 5년간 ‘바닥’ - 창업기업 수는 전국 하위권을 기록 중소기업부가 대전 내에 있었던 기간 조차 성과 미미(통계청 발표 전국 17개 시·도중 14위) - 텃스타운, 스타트업파크 등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수십억, 수백억원에 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창업지원 정책은 2020년 기준 34개 사업 47,747백만원(국비 포함)을 지원 하고 있으며 그중 기술창업 정책이 32개 사업 46,737백만원을 차지함. ※ 보도자료의 통계는 농업·도소매 포함 전체 창업수 • 위와 같이 대전시 창업지원 정책은 혁신기술의 산실인 카이스트와 대덕특구 출연연이 지역에 있다는 강점을 살려,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알자리경제국 기업 창업 지 원 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하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창업 유치 등 효과 부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주력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전략 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정책에 힘입어, 대전시는 현재 까지(2016~2021)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5,336개이고 증가률은 8.5%로 17개 시·도 중 6위를 기록함. ※ 기술기반업종 :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제조업 • 또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비율이 2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 • 대전시는 앞으로도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스타트업 파크와 팁스타운 등을 통한 도약·글로벌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수한 기업의 유출을 방지하고 타지역 우수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2021. 7.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도시가스요금 대전이 최고 - 지난 5월 기준, 대전시 도시가스 도매요금(가정·취사용)이 7,592원으로 세종과 충남·북의 6,671원보다 13% 높고, - 소비자 요금은 8,280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은 7,359원('21. 5월 기준) 으로 전국 대비 광주, 충남, 서울, 대전 순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임. *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고시하는 도매요금과 사도지사가 매년 결정 공고하는 소매요금의 합산으로 책정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 ‘참가력’ 사이트에 게시된 도시가스 도매요금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한국소비자원은 대전시 도매요금을 6,671원('21.5월 기준) 으로 게시하여야 하나, 잘못된 도매요금인 7,592원('20.7월 이전 기준)으로 게시하였음. 	과학산업국 기반산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는 7월초에 2021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결정 공고한 바 있으며, 전년도 대비 평균 0.16%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요금은 평균 10.2%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 부담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021. 7.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일보) 유성복합터미널 33층 주상복합으로...형평성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사업 눈 멀었나” 유성터미널 셀프 규제 완화 비난 - 이중 잣대 들이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 민간업체는 수익성 부족 등을 위해 층수 제한 해제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 요구했으나 특혜성 시비를 우려한 시측은 일체 수용하지 않음(민간 따로, 공영 따로 이중잣대) - 공영개발로 급선화하며 층수 제한 해제하고,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도입, 인기 없는 상업시설을 줄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공영개발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 기존 민간사업자인 'KPIH'과의 법적 소송이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셀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한 G.B.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2021. 4월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임. ’ 21.7.16. 市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건축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층수제한 폐지와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건축 허용용도 확대가 결정된 것임. ② 형평성 문제에 지적에 대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이후 유리한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 야기 우려가 있음. 대법원도 지난 2017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변경할 경우, 공모에서 탈락한 업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인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향후 추이 주목	<p>체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전 민간사업자(KPIH)는 계약 이후 용도 및 층수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시와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건축계획을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유성구에 건축허가를 받았음. •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층고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 요청을 대전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p>③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이유가 수익을 남기기 위함인지에 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부담(재정투입)을 줄이기 위한 것임. • 7.20. 브리핑 내용에서처럼 이번 기본구상(안)에는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공공기관 입주공간, 청년활동공간 등 공공성 강화 차원의 시설과 공간들이 포함되어 있음. • 터미널을 포함하여 행복주택이나 공공기관 입주공간, 청년활동공간의 경우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공익적 관점에서 최소화 한 것임. <p>④ 소송은 터미널 공영개발사업과는 별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협약해지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해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유성복합터미널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로 발표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시민들에게 조속한 유성복합터미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 진행 중으로 8월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음. 또 하나는 대전시가 전 사업자에게 줬던 터미널사업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인데, 이 소송도 2차 변론을 앞두고 있고, 면허취소 처분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1~2심은 기각됐고, 3심은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시 승소로 기각 확정됨. 	
2021. 7.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투데이) 이렇게 해놓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 주요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대 불법 적치물 적재 - 일반자전거 보관대에 무단 방치 자전거로 이용 불편 - 타 시도 대비 보관대 수 현저히 낮고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관리는 현재 자치구 위임사무로 매년 대전시에서 자전거 도로 정비예산을 지원 * 2021년 자전거 도로 정비예산 지원 : 5개 자치구 17억 원 ** 타슈설치 및 관리 : 대전시(건설도로과)에서 설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 보도내용에 따른 일반자전거 보관대 관리 관련 당부사항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니터링 할 계획임 • 아울러 올 연말 까지 대전시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일반자전거 보관대를 공유자전거 보관대 1,000개소로 확충하여 공유자전거 및 일반자전거도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도로 정비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일반자전거 보관대 확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2021. 7.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MBC) 대전 공공형 택시.. 시작부터 '빠격' - 수요 응답형 공공형 택시, 멀리서 부르면 응답하지 않는, 일반 택시와 다를 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횟수만 운행하는 마을 주민 대상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택시 콜센터 또는 택시기사에 전화하여 영업 중인 택시를 배차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중임 ❶ 멀리서 부르면 응답하지 않는 일반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콜시스템으로는 승객이 있는 장소에서 반경5km안의 택시만 조회할 수 있어 차량이 없으면 보내지 못 - 교통사각지대로 특별인센티브를 줘 콜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필요 - 전국 최초 시행이란 홍보보다 진정한 주민들의 발이 되기 위한 꼼꼼한 행정의 아쉬움 	<p>택시와 다를 게 없음 관련해서는</p> <p>⇒ 외곽지역이라 공차거리가 길어 택시기사가 콜거부를 하지 않도록 공차보상금(왕복요금 85%)을 지급하고, 콜센터이용은 별개로 공공형 택시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도 도입하여 운영중임</p> <p>② 반경 5km안의 택시만 조회 관련하여</p> <p>⇒ 일반택시 콜배치는 반경 최대 5km 이내 택시에 호출을 하고 있지만, 공공형 택시는 대전시 전지역에 호출하여 응답확률을 높이고 있음</p> <p>③ 교통사각지대로 특별인센티브를 줘 콜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필요</p> <p>⇒ 7월말까지 공공형택시 배차 수락시 1회당 콜비 5천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필요시 연장 예정임</p> <p>④ 홍보보다 진정한 주민들의 발이 되기 위한 꼼꼼한 행정 관련</p> <p>⇒ ‘21년 말까지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민 및 택시업계의 의견 수렴과 문제점 등을 보완, 외곽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p>	
2021. 7.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건설·정비업계 통합심의 방식 불만 - 통합심의 적용으로 시간 단축 실상 교통영향평가에서 수개월 - 강화된 주차기준 적용 - 부지확보의 어려움등의 변수 고려치 않아 답답함 	<p>○ 지역건설단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21. 4. 21 방침)</p> <p>- 도시+교통+경관+건축+재해 등 통합심의 전환</p> <p>※ 기존 6~9개월 소요 1.5 ~2개월 (최대 7개월 단축 효과)</p> <p>○ 현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1건(’ 21.7.22접수)에 대하여 관련부서(건축·도시·경관·교통) 의견 조회 중</p> <p>○ 통합심의 전환 후 해당 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교통영향평가만 수개월 지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p>	교통건설국 공공교통 정책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의 사전검토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임 ○ 또한 주차대수 1.4대 확보는 우리시 공동주택 주차 현 수급실태를 파악하여 대전시민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임 ※ 대구, 광주광역시 : 최소 1.3대 이상, 세종, 충북 1.5대 확보 	
2021. 7.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대전시립미술관 야외공원 내 조각작품 일부에서 낙서가 발견되었으며, 안내판 미설치 등 관리소홀 문제를 제기함. - 미술관 측은 야외 조각작품의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복원작업이나 제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립미술관은 작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음. • 야외조각작품의 보존관리를 위해 2021년 신규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처리가 시급한 작품을 우선으로 보존처리를 추진함. 	대 전 시 립 미 술 관
2021. 7.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문제 많다 •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형평성 문제 제기 • 유성복합터미널 층수 제한 폐지는 대전시 셀프 규제완화·地選 노림수 - 6,000억원의 사업비 중 1,000억원의 마이너스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전시 재원 충당 - 층수 제한 완화는 전형적인 셀프 규제 완화이며, 민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소송 진행중으로 어떤 시공사나 금융사도 법적 위험성으로 인해 참여 의향 내비치지 못함. 소송 진행 중에는 개발 계획 실행할 수 없고, 패소 시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으로 시민 세금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1,000억원의 마이너스 시민세금 충당에 대해서는 • 공공시설인 터미널을 짓는 방식은 2가지인데, • 하나는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복합개발해서 비용 충당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 세금인 시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방식임. • 우리시에서는 시민부담이 없으면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공사 공영개발을 채택하였음. •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비 등은 곧 터미널 기본건축계획 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터미널 건립에 소요되는 6,000억원 비용은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나 자체 재원으로 약 천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주택, 상가 등의 분양수익으로 추후 100% 충당할 예정임. • 분양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6,000억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 KPIH는 금융사, 시공사 협의를 위한 8개월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 가능</p>	<p>원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임.</p> <p>② 고도제한 33층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한 G.B.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2021. 4월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임. • ' 21.7.16. 市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건축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층수제한 폐지와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 건축 허용용도 확대가 결정된 것임. • 형평성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이후 유리한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변경하는 것은 특혜 논란의 우려가 있음. • 대법원도 지난 2017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변경할 경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또한, 전 민간사업자(KPIH)는 계약 이후 용도 및 층수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시와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건축계획을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유성구에 건축허가를 받았음. •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층고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 요청을 대전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p>③ 소송은 터미널 공영개발사업과는 별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해지조건에 따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유성복합터미널의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시민들에게 조속한 유성복합터미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문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 진행 중으로 8월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음. • 또 하나는 대전시가 전 사업자에게 쫓던 터미널사업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인데, 이 소송도 3차 변론을 앞두고 있고, 면허취소 처분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1~2심은 기각됐고, 3심은 신청하지 않아서 우리시 승소로 기각확정될. 무난히 우리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p>④ KPIH는 금융사, 시공사 협의를 위한 8개월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시와 도시공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터미널 건립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음. • 조건을 완화하여 다시 민자공모방식으로 추진해 볼 수 있으나, 3차 및 4차 공모시 용적율, 건폐율, 층수 등 공모조건을 완화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민간사업자 주주간의 갈등 등 내부사정으로 실패하였기에 민자공모방식 대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가 건립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결정한 것임. • 금융권 내부 투자 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에게 또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할 수 없는 사항임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7.2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일보)35도 땡볕에서...문 대통령 현장노동자 대응주문 무색 - 한낮 최고기온 35도에 편도 5차선 중 3개 차선을 막고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하며, 뜨거운 햇볕에 노동자들은 긴팔에 긴바지를 입고 땀을 흘리며 작업 - 문재인 대통령이 ‘무더위 시간대 공사 일시중지 등 조치 강구’ 및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현장 모범을 보일 것’ 주문했지만 대전 곳곳에서 공사가 그대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성대교는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신축이음 및 후타재 파손·박리 등 손상이 심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보수보강을 시행한 사항으로, • 지난 22일(목)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의거 ‘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일요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28일(수) 신축이음 교체를 완료하였다. • 또한 지난 15일(목) 대전시는 폭염 지속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각 시공사로 전파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부여 및 냉방용품·냉음료 제공 등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공사감독관의 점검 및 현장 감독 등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 	건설관리본부 시 설 부 시설관리과
2021. 7.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JB대전방송)대전시-버사회사 대표권 분쟁.. 시민불편 우려 - 시외버스정류소는 터미널과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사항에 따라 인가권과 대표권이 운송사업자에게 있는데, 대전시에서 터미널사업자를 비호 - 이전되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서지 않는 초유의 사태 발생, 시민 불편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승차권 판매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위탁의무 범위를 터미널 내의 승차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은 운송사업자에게 대표시설을 갖춘 정류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것을 면허기준으로 요구한다고 하여, 정류소에서의 승차권판매권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음(대전고법 2007라243, 2017라363 판례)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9조1호 사유로 인해 운송사업자인 OO운송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는 둔산(시외) 및 관저정류소 소송은 대전고법 2심에서 원고 패소 후, 이에 대해서 원고 000터미널에서 2019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OO운송사가 둔산(시외), 관저 시외버스정류소를 직접 설치하였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결로서 확정되지 않은 판례를 유성시외버스정류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정류소는 운송사업자가 매 표시설을 갖춘 부대시설인 시설 설치기준에 불과한 사항으로 정류소 단순 위치 이전은 운송사가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관할관청에서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 정류소에 대한 인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유성시외버스정류소를 장소만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유성시외버스정류소의 승차권 판매시스템 운영과 정산 주체인 00터미널사업자와 이전 예정인 유성시외버스정류소의 승차권 판매 협약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② 이전되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서지 않는 초유의 사태 발생, 시민 불편 우려에 대하여 • 비좁고 노후된 시설 및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호소해오던 정류소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하는 것인 만큼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시와 관할관청(충청남도 등)에 운송사업자에 대한 적극 설득 협조요청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2021. 8.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일보)넬브러진 전동킥보드 장애인 아슬아슬 보행 - 장애인의 경우 방치된 PM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일반 시민들의 보행에도 불편 - 무단으로 주차된 PM을 견인할 법적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발의 * 법률안 주요내용: 거치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시 이동·보관·매각 가능(지자체 조례) 등 • PM 주·정차 금지구역(13개 구역) 지정 운영 중 *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차도, 소방시설 구역, 터널안 등 • 방치 및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2시간 이내 처리 * 공유킥보드 업체 간담회('21.5.27.) 시 협의완료 ** 자치구 및 공유킥보드 대여업체 등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전거 도로 정비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PM 주·정차 표준 조례 제정 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정차문제 해결 계획임.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2021. 8.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일보대전 공공형택시 시범운영'빠져' ...기사들 “수지타산 안맞는다” 외곽지역 기피 -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대상... “호출할 택시가 없어” - 택시업계 “외지라 콜받으면 손해” ...보완책 마련 절실 - 공공형택시 대상 시민들의 반응이 크지않아 사업 활성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 공공형택시는 시내버스 승강장과 거리 멀거나 극히 적은 횡수만 운행하는 마을 주민 대상으로,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택시 콜센터 또는 택시기사에 전화하여 영업 중인 택시를 배차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중임 ❶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대상... “호출할 택시가 없어” 관련해서는 -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소외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형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브랜드 콜센터 차량의 90%인 4,900여대를 공공형택시로 등록하여 운영중임 ❷ 택시업계 “외지라 콜받으면 손해” 보완책마련 절실 관련 	교통건설국 운송주차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곽지역의 공차거리 부담에 따른 택시기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차보상금(왕복 운행요금 85%)과 함께 5,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공공형택시를 운영하는 타 도시(시·군)와 공차보상금 비교 시 우리시에서 산정한 공차보상금은 왕복택시 요금의 120%(전국 최고 수준)로 택시기사가 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 향후 공공영택시 시범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차등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차보상 기준을 보완할 계획임 <p>③ 공공형택시 대상 시민들의 반응이 크지않아 사업 활성화 필요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택시의 사업목적에 따라 버스정거장까지 거리가 멀거나, 버스운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버스탑승이 편리한 지역에 목적지를 1개소만 지정하고 있으나,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목적지를 추가할 예정임 - 아울러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형택시 운행을 확대할 예정으로, 8월 말부터는 괴곡동 주민들도 공공형택시 이용이 가능함 	
2021. 8.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매일) 대전소방헬기 카톡으로 교신...안전은 뒷전 - 대전 소방헬기의 무선통신 방법이 황당, 카카오톡 이용 - 헬기조종사 등이 안전을 뒤로 한 채 휴대전화에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운항 중에는 프로펠러의 소음과 통신음영 지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황관리를 위해 대체수단인 휴대전화로 헬기에 탑승한 구조·구급대원이 현장위치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황실 또는 신고자와 전화통화하여 그 내용을 ICS통신(기내통화)와 VHF망 무전을 통해 기장·부기장과 통신하며, 사진 등 특이 전달사항이 있을 때에는 헬기 정비사를 통하여 기장 부기장에게 ICS(기내통화)로 전달함. • 헬기와 교신방법은 「VHF, LTE-무선교신, UHF, 카카오톡」 운영 - VHF : 헬기전용 VHF기지국 운영 중 	대전소방본부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p>(상황실 ↔ 헬기 ↔ 항공 구조·구급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E-무선교신 : 항공기와 상황실 간 LTE통신 무전기 설치 운영 중 - UHF : 디지털 통합무전망(상황실 ↔현장출동대원) - 카카오톡 : 통신음영 등 보조수단 (현장사진 등 송출) <p>• 조종사는 직접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비행 시 조종사·부조종사, 정비사, 항공 구조·구급대원이 탑승하며 VHF망 또는 ICS(기내통화)로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항공 구조·구급대원이 추가로 소지한 UHF 무전기를 통해 상황실 또는 지상 구조대원과 통신 후 VHF 또는 정비사를 통해 ICS(기내통화)를 통해 조종사에게 무전상황을 전달하고 있음 - 통신 보조수단인 카카오톡은 구조대상자 또는 통신 음영지역에서 상황실, 지상대원과의 문자통화 현장사진 등을 정비사를 통하여 조종사·부조종사에게 헬기 내 통신수단인 ICS(기내통화)로 상황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용중 - 산악구조 등 임무 비행 시 구조대상자 위치 변동, 상황변경 발생 시 유선통화·문자·카카오톡·산길샘·기상상황 등 다양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항공 구조·구급대원이 사용 중이며 이러한 사항은 ICS(기내통화), VHF 또는 정비사를 통하여 ICS(기내통화)로 기장과 부기장에게 전달 상황관리 유지하고 있음. <p>• 향후계획(무선통신망 개선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전통신망 이원화로(VHF·UHF) 조종사와 지상의 현장대원 간 직접 소통이 불가한 상태로 소방헬기 기장 및 항공대원, 119상황실, 현장(지상대원)간의 원활한 의사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소통과 상황관리를 위해 금년도 대전소방헬기에 디지털 소방무선 통신망(UHF)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1. 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TV 뉴스)CT에 X-ray까지 병원 업무가 119구급대원 몫? - 소방본부의 지시로 병원 의료진의 업무를 119구급대원이 떠맡고 있어 병원에 발이 묶여 다른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 119구급대원들이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뒤늦게 병원 업무 지원을 중단했다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본부의 지시 유무 및 응급환자 이송 차질」 부분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업무담당자 및 구급대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사항으로써 소방본부의 일방적 지시는 아님 * 병원 측의 협조요청이 있어 5개 소방서 담당자를 통해 구급대원 의견 수렴 한 결과, 구급대원이 동의하여 추진 ('21.4.16.) - 119종합상황실 자료 및 구급활동 정보시스템 자료 등에 의하면, 병원 측이 신속한 선별검사 및 환자를 수용하여 응급환자의 이송에 차질을 빚은 경우는 없음(민원 사항 없음) * 선별검사 소요시간: PCR검사(2시간~8시간) / CT, X-ray(30분~1시간) • 「소방청 민원 제기 후 병원 업무 지원 중단」 부분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대원 병원 업무 지원중단’은 소방본부장 면담 시 소방 노조가 요구 한 사항으로, 소방청에 민원 제기한 사항은 아님 -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의견수렴 후 소방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병원 측 방문·관계자 협의를 거쳐 구급대원의 병원 업무 지원 중단 지시('21.8.17.) 	소 방 본 부 구조구급과
2021. 9.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MBC)향나무 훼손 대전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반토막’ 위기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재개되나, 사업규모 축소 전망 - 내년 행정안전부에 책정된 사업비가 기존의 절반인 10억원에 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협업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협업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으로, - 3년간(2019~2021) 총사업비 123.5억원이고, 국·시비 매칭 추진해 옴 	시민공동체국 지역공동체과

일 자	방 법	보 도 내 용	해 명 내 용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규모가 큰 쪽으로 바뀔 우려 있음 	<p>*국비(49%) → 운영비 60억원(3년 × 20억원), 시비(51%) → 시설비 63.5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여 이를 가내시 하였고, 국·시비 매칭 비율 (45%:55%)도 통보됨에 따라, - 대전시는 내년도 운영예산을 총 22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2억원)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임 • 따라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운영은 사업비 축소 없이 추진 예정이며, - 또한, 문체부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소통협력공간이 시민에게 제공되고, 나아가 본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7. 언론사 신문, 잡지 등 구독료 집행현황(2019~2021)

○ 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언론사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신문	42	21,600	10,794	

○ 2020년

(단위 : 천원)

구분	언론사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신문	43	21,600	21,552	
잡지	4	7,700	960	
기타	8		3,323	

※ 기타 내역 : 연감, 한국인물사전 등 정기간행물

○ 2019년

(단위 : 천원)

구분	언론사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신문	43	21,600	21,420	
잡지	6	7,700	1,542	
기타	12		6,262	